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2008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부 서 론】

【제2부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4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4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7
1.	당사국의 이행의무(협약 제4조)	17
2.	협약 홍보(협약 제42조)	18
3.	국가보고서 활용 (협약 44조 6항)	20
제3절	STATISTICS	20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20
제2장	아동의 정의(제1조)	22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22
제2절	NATIONAL PROGRAMMES	22
제3절	STATISTICS	23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24
제3장	일반 원칙	25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25
제2절	NATIONAL PROGRAMMES	31
1.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31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34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35
4.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협약 제12조)	39
제3절 STATISTICS	42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44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45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45
제2절 NATIONAL PROGRAMMES	47
1.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47
2.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48
3.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49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49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50
6.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50
7.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52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1항)	55
제3절 STATISTICS	56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57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9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59
제2절 NATIONAL PROGRAMMES	65
1.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1항, 2항)	65
2.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68
3.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69
4.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4항)	70

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71
6. 입양(협약 제21조)	73
7.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73
8.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학박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74
9.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76
제3절 STATISTICS	77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79

제6장 기초보건 및 복지 80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80
제2절 NATIONAL PROGRAMMES	86
1.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2항)	86
2. 장애아동(협약 제23조)	90
3.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93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99
5.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항, 2항, 3항)	101
제3절 STATISTICS	102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04

제7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06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06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10
1. 교육에의 권리(협약 제28조)	110
2.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112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114
제3절 STATISTICS	116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20

제8장 특별 보호 조치	122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22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30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30
가. 난민아동(협약 제22조)	130
나. 무력분쟁하의 아동(협약 제38조)	131
다. 소년사법(협약 제40조)	131
라.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항, 4항)	136
마.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1항)	138
바.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138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39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139
나. 마약(협약 제33조)	140
다.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협약 제34조)	141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144
제3절 STATISTICS	145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48

【제3부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제9장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50
제10장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70
부표	179

【부 표】

〈부표 1- 1〉 아동관련 예산.....	181
〈부표 2- 1〉 아동인구.....	181
〈부표 3- 1〉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182
〈부표 3- 2〉 징계절차.....	182
〈부표 3- 3〉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182
〈부표 3- 4〉 학교폭력 유형.....	183
〈부표 3- 5〉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183
〈부표 3- 6〉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183
〈부표 3- 7〉 아동 익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184
〈부표 4- 1〉 체벌금지 학교 수.....	184
〈부표 4- 2〉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증가율.....	184
〈부표 4- 3〉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184
〈부표 5- 1〉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185
〈부표 5- 2〉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결과.....	185
〈부표 5- 3〉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186
〈부표 5- 4〉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186
〈부표 5- 5〉 아동복지시설 현황.....	186
〈부표 5- 6〉 국내·외 입양 현황.....	187
〈부표 5- 7〉 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187
〈부표 5- 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187
〈부표 6- 1〉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188
〈부표 6-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188
〈부표 6- 3〉 다문화 아동 현황.....	188
〈부표 6- 4〉 특수학교 학생 통학현황.....	189
〈부표 6- 5〉 영아사망률.....	189
〈부표 6- 6〉 모성사망률.....	189
〈부표 6- 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	190

〈부표 6- 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190
〈부표 6- 9〉	저체중아 발생률.....	190
〈부표 6-10〉	BCG 신생아 예방접종 실적.....	191
〈부표 6-11〉	예방 접종률.....	191
〈부표 6-12〉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	191
〈부표 7-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2
〈부표 7- 2〉	남·녀 고등교육 진학비율.....	192
〈부표 7- 3〉	학교 현황.....	192
〈부표 7- 4〉	학급당 학생수.....	193
〈부표 7- 5〉	교원 1인당 학생수.....	193
〈부표 7- 6〉	학교급별 진학률.....	193
〈부표 7- 7〉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194
〈부표 7- 8〉	중·고등학생 학업중단율.....	194
〈부표 7- 9〉	특수학교 현황.....	194
〈부표 7-10〉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95
〈부표 7-1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195
〈부표 7-12〉	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	196
〈부표 7-13〉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197
〈부표 7-14〉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197
〈부표 7-1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197
〈부표 7-16〉	문화기반시설 수.....	198
〈부표 7-17〉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 시간.....	198
〈부표 8- 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198
〈부표 8- 2〉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률.....	199
〈부표 8- 3〉	소년범죄 처리 현황.....	199
〈부표 8- 4〉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00
〈부표 8- 5〉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200
〈부표 8- 6〉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200

【 제1부 : 서 론 】

서론

1.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 특히, 2000년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계기로 국제적 수준의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아동 관련 예산의 확대,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3. 정부는 2002년에 아동이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4. 2003년에는 학대, 폭력,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통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2004년에는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빈곤아동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5. 이와 더불어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인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하여 청소년의 권리신장, 정책참여기회 확대, 복지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추진하고 있다.
6. 또한 아동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와 활동 증진, 보육, 성폭력 예방 등에 관련된 예산은 2003년에 약18조원에서 2007년에는 약28조원으로 늘어났다.
7. 2008년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정책은

보건복지부(아동정책), 여성가족부(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정책)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해 왔는데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8.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동 계획은 아동의 기본생활보장, 안전·보호, 건강, 보육·교육, 놀이·활동·문화, 참여·권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이 담겨질 것이다.
9. 정부는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시에 유보하였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10. 정부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11. 본 국가보고서는 각 영역별로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 아동정책의 변화된 내용, 2008년 6월에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선택의정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아동관련 통계자료와 이행상의 장애요인 등도 포함하였다.
12. 보고서 작성에는 정부부처 외에 아동관련 학계 및 아동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아동을 포함한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3.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제2부 :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2장 아동의 정의

제3장 일반원칙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6장 기초보건 및 복지

제7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8장 특별보호조치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제4조, 42조, 44조 6항)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유보

CRC/C/15/Add.197, para. 10:

The Committee, noting that juveniles sentenced for having committed a crime have the right to appeal,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as soon as possible, the reservations made to article 40, paragraph 2 (b) and (v). The State party is also encourag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ivil Act so that both children and parent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change public attitudes to domestic adoption, in order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to articles 21, paragraph (a), and 9, paragraph 3,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in 1993.

14. 정부는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세 가지 유보조항 중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2007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현재 유보를 철회하였다. 아동 입양 허가제 도입은 국내 입양문화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다만, 아동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둔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동의 상소권(제40조 2-b-v)

15. 아동의 상소권 제한은 「헌법」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따라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비상계엄에서도 모든 범죄에 대한 상소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에 규정된

죄들(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에 대한 죄, 포로에 관한 죄 등)에 대해 단 심제로 적용하고 있다. 이유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입양허가제 도입 및 인식개선(21조 a항)

16. 종래 「민법」은 당사자 간의 입양 합의에 의한 입양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입양의 성립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요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를 단절하고 법률적·실제적으로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17. 국내입양에 있어 친양자제도의 도입으로 입양허가제를 요구하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의 취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지만, 국내입양 전반에 대하여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데는 국민인식과 국내 입양현실의 측면에서 아직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는 입양촉진 차원에서 볼 때 국내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양에 관한 국민 인식변화와 국내 입양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18. 현재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외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사회각계 차원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19. 정부는 당장에 전면적인 입양허가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05년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 ‘국내입양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TV, 인터넷, 종교 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입양에 대한 편견 불식 및 입

양을 또 하나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홍보하였다.

20. 이와 같은 인식 개선 노력은 2007년에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상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국외입양은 국내입양의 대체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한다는 협약 제21조 (b)항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제9조 3항)

21. 정부는 1991년 협약 비준 시 제9조 3항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은 「민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제한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22. 정부는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아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2월에 「민법」을 개정하여 협약상의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에게도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민법>

• 제837조 2(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3. 정부는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담은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되고, 양육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협의 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입법

CRC/C/15/Add.197, para. 1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conforms full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4. 정부는 2003년 이후 협약의 이념이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아동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구분	시기	법령	관련 정책
개정	'04~'07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확대 • 가정위탁 개념, 가정위탁센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 확대
	'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온라인상 청소년보호 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04	영유아보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령 마련
	'04	소년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 학교를 정규학교화 함.
	'05, '0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정보등록 열람제도 신설('05)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취업제한 제도 강화 및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07)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검사, 경찰관 지정·운영, 진술녹화제도 도입 •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 •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개정
	'05	청소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관계기관 협의회 마련 •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등 참여기회 확대
	'05, '07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제 폐지, 친양자입양제도 도입('05), 여성의 결혼연령 상한조정,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신설, 협의이혼 시 아동양육자 결정.
	'05	학교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육 강화, 학교주변 유해환경 설치 금지 강화
	'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 •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마련
	'07	초·중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보장의 무효 규정 신설
	'07	소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화·선도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 적용연령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 •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마련

구분	시기	법령	관련 정책
개정	'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구금자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함
	'07	형사소송법	•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 진술 및 재판상 증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신규	'04	유아교육법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04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복지 및 권리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등
	'04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보장 및 참여
	'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0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근절 • 피해자의 인권보호
	'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생인권보호 •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0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0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이후의 사회적응 지원
	'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 등
	'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제도 마련 •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대법원 관장
	'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재한외국인 및 자녀에 대한 차별금지
	'0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아동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위치 추적제도 도입
	'0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및 제도적 장치 마련
	'08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의 복지 및 인권보장

3. 조정

CRC/C/15/Add.197, para.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oaden the scope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Child Rearing, formulated in 2001, to include all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ments made at the United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May 2002) and outlined in the outcome document entitled "A World Fit for Childre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signate one permanent and central mechanism to be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all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and ensure that it has the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effectively.

관련 법

25. 정부는 2004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6.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12인과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9인의 당연직 위원과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은 아동관련 단체장 또는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7. 동 위원회는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 아동정책 및 아동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 사항
-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CRC/C/15/Add.197, para.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such a monitoring mechanism and actively monitor its activitie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8. 정부는 아동의 권리증진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였다. 동 센터는 아동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협약의 영역별 전문가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는 2008년까지 시범운영 된다.
29. 현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성인 21인, 아동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은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은 일반아동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장애아동, 기초수급대상 아동 등 다양한 환경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 협약 이행상황의 모니터링,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하여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독립적인 모니터링

CRC/C/15/Add.197, para.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annex)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 Ensure that there is at least one child rights expert amongst the Commissioners, or alternatively, that the Commission establish a sub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 (b) Ensure that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 accessible to children, in particular by raising awareness of its power to receive, investigate and address complaints by children in a child-sensitive manner.

국가인권위원회

- 30.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권고, 인권상담, 인권교육, 홍보, 연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3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법조계, 학계, 여성계,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인권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동 관련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자문기구로서 '아동인권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32.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인권보장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진정을 낼 수 있다. 이는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6. 자원의 할당

CRC/C/15/Add.197, para.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y:

- (a) Prioritizing budgetary allocation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belonging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to the maximum extent of ... available resources."
- (b) Identifying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the State budget spent on children in the public, private and NGO sec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expenditures and also, in view of the costs, the accessibility,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provided to children in the various sectors.

- 33. 정부는 아동복지 및 보육, 청소년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은 물론 전체아동의 복지 및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고 있다.
- 34.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육예산은 2003년 약3천1백억원에서 2007년 약1조4백억원으로 234.4% 증가하였다.
- 35. 정부는 18세 미만 저소득아동에 대한 무상의료급여 실시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등 빈곤아동·청소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월 20만원까지 증액하였고, 수급대상자도 2002년 2,617명에서 2007년 2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36. 정부는 학교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사업, 특수교육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예산은 2003년 약17조6천억원에서 2007년 약26조8천억으로 52.2%가 증가하였다.

37.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청소년성장환경 개선 등에 투입된 청소년예산은 2003년 약9백억원에서 2007년 약1천6백억원으로 77.8%가 증가하였다.

38.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관련 예산은 2003년 약63억원에서 2007년 약203억원으로 221.8%가 증가하였다.

7. 자료 수집

CRC/C/15/Add.197, para. 2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disaggregated data, specifically for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nd use these data and indicators for the formul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mplete the work on the child rights' index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 able to evaluate continuously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39. 정부는 매년 5월, '청소년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건에 대한 통계집을 발간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에는 아동권리 수준을 파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앞으로도 권리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아동권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권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동관련 통계 수집

40.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통계집은 아동의 활동, 복지,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02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인구와 가족, 교육, 노동, 보건, 복지, 교통과 정보화, 문화와 여가·사회참여,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정부출현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을 대상으로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데이터는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2. 정부는 2006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한 곳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교육통계 One-Stop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수요자가 신속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3. '소년사법'과 관련한 통계는 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 소년보호통계, 보호관찰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되고 있다. 범죄분석은 매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소년범죄 처분현황 및 소년범죄자의 비행·환경 등 12개 항목, 학생범죄자의 범행동기 등 10개 항목,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처분결과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법연감은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의 접수내역, 처리상황, 보호소년에 대한 분석, 접수·처리·미제별 누년통계, 연령별·처분별 누년비교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백서는 매년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소년범죄 동향, 소년사건 처리현황, 소년수행자의 처우, 소년보호관찰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보호통계는 격년으로 발간하며 소년범죄현황,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및 교육현황 등을 제공한다. 보호관찰통계연보는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소년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처분·집행 등 관리 대상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4. 정부는 위와 같은 아동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청소년백서'는 아동과 관련하여 부처에서 수집된 통계자료 및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정책,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에 따라 2008년부터는 '아동청소년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지표

45. 정부는 2003년에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지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8개 영역을 참고로 하여 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로 구성되어 있다.
46. 2006년에는 현행 통계체계가 아동권리 전반에 걸쳐 수집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40개 주요아동지표(Key Indicators)'를 만들었다. 아동 지표를 아동발달 단계별 조기개입, 양육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 아동정책 수립과 각종 아동복지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등 아동을 위한 국가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47. 정부는 또한 유엔 등의 권고내용과 국내·외 지표 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영역으로 하는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였다.

8.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감독

CRC/C/15/Add.197, para. 24: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of civil society as a partner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vol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a more systematic and coordinated manner, in all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policy formulation,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in the drafting of future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2002 on the theme "The private sector as service providers and its role in implementing child rights"(CRC/C/121, para. 630) and improve its supervision of private organizations delivering services by, inter alia, improving the system of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of service providers.

48. 정부는 사적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49. 정부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청소년 흡연예방,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9. 홍보

CRC/C/15/Add.197, para. 26:

While noting the activities of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children's right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42 and 44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its own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Undertake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children's right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and specifically at children;
- (b) Carry out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 particular teachers, judges, parliamentarians, law enforcement officials, civil servants, municipal workers, personnel working in institutions and places of detention for children, health personnel, including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50.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아동권리인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 개발 및 교육에 힘쓰고 있다.

51.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일반논평 등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통해 쉽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사법기관 종사자, 경찰, 일반 행정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과 아동관련 종사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52. 법무부는 2006년 ‘인권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년보호와 관련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대상 연수 시 ‘학생생활 지도 방법 제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함께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3. 정부는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 기간은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에 관심을 갖기 이전인 1922년에 아동의 노동을 없애고, 배우고 즐겁게 놀 권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어린이 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주간이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당사국의 이행의무(협약 제4조)

54. 정부가 추진한 아동관련 3대 종합대책과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아동의 보호와 육성, 안전, 기본생활 보장, 권리, 참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아동권리 증진의 법적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2008년에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법 제·개정은 적극적인 아동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정책5개년기본계획’ 수립은 아동관련 종합대책을 포괄적으로 계승한 아동권리증진의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55. 2008년에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법 제·개정은 그 동안 이원화되어 추진되어 왔던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의 통합을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함이다.
56.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 함께 아동권리실현의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 계획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고,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것이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다. 동 계획은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아동관련 종합대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7.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향후 정부는 협약의 이념을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 협약 홍보(협약 제42조)

58.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협약 홍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동관련 종사자 교육으로 협약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교원연수와 학교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교사와 아동에게 협약을 홍보하고 있다.

59.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제고 및 폭력예방·근절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는 전문직·관리직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교사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별로 아동권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60. 법무부는 2006년에 ‘인권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년사법』과 관련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적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법 종사자 양성기관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1.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매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권리협약을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2.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에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개발 하고 있다. 교육교재는 아동관련 시설종사자, 교원, 아동 및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 및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6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9월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를 개통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인권에 대해 쉽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였고, 아동권리와 관련한 국제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64.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06년에는 유아용 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 사회드라마(Sociodrama), 지역아동인권센터 인권교육 프로그램, 성 인지적 해외 사례 연구, 인권친화적 학교운영 모델 등 5종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65.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교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6년에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의 연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3. 국가보고서 활용 (협약 44조 6항)

66. 1994년과 2000년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2006년에 제출한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비롯한 아동권리협약 관련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7. 정부는 본 보고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정부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가 NGO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본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제3절 STATISTICS

아동관련 예산

68. 정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아동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부표 1-1>.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69. 정부는 친양자입양제도를 신설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 성립의 전면 허가제를 향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입양과 관련한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관련 법률, 사회적 인식 문제 등에 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상소권 제한은 분단국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70. 정부는 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관련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조항을 철회하는 등 2003년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2장 아동의 정의(제1조)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CRC/C/15/Add.197, para. 2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that it raise the minimum age of marriage of girls to that of boys.

71. 종전의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의 합리적 근거 없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07년 11월 「민법」을 개정하여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남자(만18세)와 동일하게 하였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아동의 정의(협약 제1조)

72. 현행 법 체계는 법의 목적 및 정책내용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아동관련 법률의 적용연령 기준〉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만19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	14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모자보건법	영유아	6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부양의무자가 없는 18세 미만

제3절 STATISTICS

아동인구

73. 아동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변화 추이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동인구 비율은 2003년 24%에서 2007년 22.1%로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21.5%로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부표 2-1>.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74. 현행 법체계에서의 다양한 연령기준은 아동의 권리실현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법의 목적에 따라 정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령기준 통일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 일반 원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일반원칙

CRC/C/15/Add.197, para. 3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ppropriately integrate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namely articles 2, 3, 6 and 12, into all relevant legislation concerning children;
- (b) Apply those principles in all politica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as well as in projects, programmes and services which have an impact on all children;
- (c) Apply those principles in planning and policy-making at every level, as well as in actions taken by social and health welf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ourts of law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75. 정부는 협약의 일반원칙이 반영된 법률, 규칙에 근거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협약의 일반원칙은 아동관련 정책에 적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각종 정책은 일반원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2. 차별금지

CRC/C/15/Add.197, para. 32, 3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act legislation explicitly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clude all grounds enumerat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ll necessary proactive measures to combat societal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nd girls through, inter alia,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s.

The Committee requests that specific information be included, in the next periodic report, on the measur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the Convention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follow up on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eld in 2001, taking account of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article 29, paragraph of the Convention (aims of education).

76. 최근까지 제·개정된 아동관련 법률은 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2006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2008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자의 아동도 거주지 확인만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다문화아동, 새터민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법

77.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법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및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인종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동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78. 정부는 2007년 3월에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현재 정부는 동 협약의 국회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준 후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79.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수업·실험·수학여행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통학·이동 및 교육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80. 2007년 5월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장애아동 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81. 정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인종차별금지

82. 정부는 2001년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이주아동의 교육 및 건강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초기 이주가정의 아동이 원활하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아동에게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83. 정부는 외국인 아동을 위하여 한국어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외국인 아동 밀집지역 학교 등을 특별학급 또는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8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아동을 위하여 2007년부터 지역사회 다문화아동 종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다문화아동의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부산(도시형), 2008년 익산(도·농형)에서 실시되었다. 향후 다문화아동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다문화아동 종합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5.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반편견·반차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타문화에 대한 편견해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무지개문화탐험대'를 운영하여, 이주아동과 한국의 아동이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에 기반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터민 아동 지원

86. '새터민'이란 북한을 이탈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거주하는 자를 일컫는다. 종전에 사용하였던 '탈북자'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자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새터민 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입국초기(하나원 재원 중)부터 정착 시까지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87. 정부는 하나원 입소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사회입문프로그램, 거주지 방문교육으로 이어지는 새터민아동의 정착초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인력 양성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새터민아동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터민아동을 위한 정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CRC/C/15/Add.197, para.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 (a) Ensure that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2000, be revised to includ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ak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and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by courts, administrative bodies, school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e education system;
- (b)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inter alia, parents, educators,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participat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 (c) Undertake a regular review of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of the impact this has on policies, programmes and children themselves.

88. 정부는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을 비롯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a) 관련법

89. 정부는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에는 ‘인종’차별금지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확대,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협약의 기본원칙, 특히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0. 정부는 2007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과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시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91. 정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부모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지를 침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b) 아동권리 정보제공

92. 정부는 각종 인권교육을 통하여 아동과 학부모, 교사에게 아동 의사표현과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관련 민간단체의 아동권리 홍보사업 지원을 통해서도 아동의 의사표현과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 아동의 견해와 그 영향에 대한 평가

93. 정부는 2008년에 전국단위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동정책의 목표설정 및 중장기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동 조사는 아동의 견해가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존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에는 아동학대, 폭력,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및 보건·복지·교육 등 아동의 성장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94. 차별금지의 원칙은 「헌법」과 아동 관련법의 기본정신이다. 정부는 아동이 어떠한 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함은 물론 외국인 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95. 2007년 5월 정부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각국에 권고된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 따라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헌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6개 핵심인권조약의 내용을 기초로 향후 2011년까지의 인권에 관한 법·제도·관행의 개선과 관련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규정된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정신과 함께 이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제도는 아동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96.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의 규정에 따라 2008년에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본 기본계획에는 아동이 외모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적 인식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려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 증진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실제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97. 정부는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6년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규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98. 본 대책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대학생 멘토링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1대 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교원연수 강화, 교육과정 개정 시 도덕교과에 ‘타문화 편견극복’ 단위 포함, 지역단위의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부처 협의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99.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인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요 차별행위 권고사항에 대한 대국민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차별금지의를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100. 정부는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8년 5월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재는 법무부가 차별 관련 국내 법제 및 해외 입법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차별’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 1번을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게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어린학생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101. 정부는 아동관련 법률의 제·개정,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의 추진에 있어서 협약의 일반원칙, 특히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각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정책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102.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아동이 최대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가정보호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3. 정부는 성폭력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진술을 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녹화하게 하고, 재판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4. 정부는 또한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3.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105. 정부는 2003년 이후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추락, 익사, 중독 대책 등 12개 분야 58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106. 정부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학교폭력은 현재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07. 정부는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에 관계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교직·교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8. 정부는 체벌, 두발 규제 등과 관련된 학생인권 보호는 물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9월 11일에는 전국 1만여 각급학교와 16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181개 지역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행사를 실시하였다.

109.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 내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권적인 학교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운영하여 실천사례를 확산시키고, 대안교육 체제를 강화하였다. 2007년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동안전종합대책

110.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부처·청이 범정부차원의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대통령비서실에 ‘어린이안전점검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개의 법률을 제정하고, 11개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 안전 관련 법령정비 현황〉

구분	시기	법령	주요내용
신설 법규	'0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문제 효과적 대처 전담기구 설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05.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이후의 사회 적응 지원
	'07.1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근거 마련
	'07.1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 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원화 및 체계화
개정 법규	'04.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예방교육홍보 방법과 시기 명시
	'04.10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어린이보호포장제도 도입
	'05.12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 제도 개편 및 신속조치제도 신설
	'05.3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05.3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예방교육의무화 등
	'05.3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안전 도모
	'05.5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05.7	수난구조법	구조구급 책임명시
	'05.11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관련 시설 방염처리제품 사용
	'05.12	약사법	약품보호포장용기 도입
	'06.6	소방기본법	안전체험관 설립근거 마련
	'07.1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청소년자살 예방

111.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2004년에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청소년 관련 대책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시도자의 긴급구조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살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청소년자살예방대책'을 2007년 9월에 수립하였다.
112.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등을 통한 긴급구조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자살위험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정

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113.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서비스 욕구 수준은 높아가지만, 청소년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산과 상호협력체제 부재로 지역사회의 지원체제는 취약하였다. 이에 정부는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을 2005년에 구축하였다. CYS-Net 사업은 2007년에는 16개 시·도와 52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114.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으로 통합지원체제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115. 정부는 2005년부터 그동안 인지도가 낮았던 '청소년 긴급전화 1388' 및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등을 통합하여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의 관문으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SMS(Shot Message Service)와 VM(Virtuer Machine)을 구축하였다.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은 전국 142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인터넷, 언론,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이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하루 평균 675건으로 274%가 증가하였다.

4.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협약 제12조)

116. 정부는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법 제·개정

117. 정부는 아동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와 참여권 보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 제3조 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제10조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를 실시할 시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 제5조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제12조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조 2항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18.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먼저 중앙차원에서 청소년 정책과제 설정·추진·점검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특별회의’를 설치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

과 민주성,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관련 시설에는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운영되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

119.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16개 시·도 청소년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연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시설 중심의 지역단위의 참여기구이며,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정책의제로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회의를 거쳐, 매년 실시되고 있다.
120.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참여기반확대’라는 정책의제와 ‘비폭력 반편견 청소년 평화운동’이라는 실천의제를 갖고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이 전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참여관련 6개 영역, 20개 과제를 채택하였다.
121. 2006년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을 정책의제와 ‘서로 존중하는 청소년사회 만들기’를 실천의제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교육·복지·사회문화 등 5개 부문 16개 정책과제를 채택하였다.
122. 2007년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이전의 특별회의와는 달리 별도의 정책의제를 정하지 않고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임을 감안하여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된 98개의 정책과제 중 ‘비만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등 35개 과제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123.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는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정책의제로 선정·추진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

124.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25.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데, 2003년 42개에서 2008년 현재 162개로 확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 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약 3,200여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126.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의 공공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시설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수련시설 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27.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3년 88개에서 2008년 258개가 전국 16개 시·도의 생활권 수련시설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

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현재 약 3,8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정기회의, 시설운영과정 및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아동총회

128. ‘대한민국아동총회’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아동대표들이 외국아동들의 활발한 참여 동향을 접한 후 아동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가 모여 아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행사이다.

129. ‘청소년특별회의’의 참가자가 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데 반해 아동총회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아동총회는 ‘아동권리 수호천사’ 응모를 통해 선발된 100명과 16개 시·도 및 아동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50명 등 총 150명의 아동대표들이 참가하여 특정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친 후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2006년에는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2007년에는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2008년에는 ‘아동이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3절 STATISTICS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130.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생활규칙 제·개정과 징계통보 및 소명절차 등의 진행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131.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에 있어서 교사의 67.6%는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이 협의한다고 응답하였다.<부표 3-1>.

132. 학생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통보나 소명절차, 전문적인 지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징계통보나 소명절차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표 3-2>.

학교폭력 실태

133.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으로 발생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수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부표 3-3>.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금품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부표 3-4>.

아동안전사고

134. 정부는 ‘아동안전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2003년 1,523억원에서 2007년 2,746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본 대책의 시행으로 전체 아동 안전사고(교통, 익사, 추락사고 등) 사망자는 2002년 1,210명에서 2006년 645명으로 46.7% 감소하였다<부표 3-5>.

135. 아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단속강화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2005년에는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까지) 등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2년에 468명에서 2006년에는 276명으로 41% 감소하였다<부표 3-6>.

136. 아동 익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구명복 및 물놀이 안전기준을 강화하였고, 익사 사고 빈발지역에는 2004년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였다. 아동 익사사고 사망자는 2002년에 198명에서 2006년에는 78명으로 60.6% 감소하였다. 또한 아동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3년에 주택난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품

목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동 추락사고 사망자는 2003년에 108명에서 2006년에는 58명으로 56.7% 감소하였다<부표 3-7>.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3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학습이해도가 낮고, 친구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8. 정부는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동의 의사표현과 참여를 제도로 보장해 나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아동총회’를 매년 개최하여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39. 정부는 학교에서의 인권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징계 절차 등에서 아동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교육, 연수과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의사표현 존중과 참여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관련 시설,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7조 1항)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표현과 결사의 자유

CRC/C/15/Add.197, para. 37:

In the light of articles 12 to 1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legislation,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facilitate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political activ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school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fully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140. 정부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생활규정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141.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창의적 실시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142. 정부는 학생회 대표가 그 조직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교칙 공시제 전환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자율적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143. 정부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생주도의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체벌

CRC/C/15/Add.197, para.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be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 (b)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n alternative to such punishment.

144.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45. 체벌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제7항)은 학생을 지도할 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심한 폭행·욕설행위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체벌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양정기준을 강화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대법원판례, 2004.6.10>

2004년 6월 대법원은 체벌에 대하여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 2006.7.27>

2006년 7월 헌법재판소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의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라고 판결하였다.

146.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비폭력적인 훈육방법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교육사업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2008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규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147.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적법」에 의거하여 이름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48.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거 친족이

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아를 발견한 사람,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149.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동의 신분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등재된다. 아동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제 폐지로 인한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2007년 5월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2005년 「민법」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부성주의의 원칙을 수정하여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민법」개정에 따라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15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은 기존의 「호적법」이 개인의 정보보호에 취약하였지만,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3.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152.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153. 정부는 학교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개개인과 학생회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교내 전단지 배포로 인한 징계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권리행사에 있어서 교사의 교권과 충돌 시에는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4월, 박모 학생이 P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학생인권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P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안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 표현물의 표현 범위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15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양심에 따라 결정할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신앙·선교 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155. 「민법」 제913조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아동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아동에게 강요할 수 없다. 또한 특정의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인 종교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논란이 있었다.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156.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2003년부터 각급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 신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157.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 학교생활규정을 제출받아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분석하여 문제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학생 권리를 적극 보호할 것을 밝히고, 각 학교의 교사·학부모·학생이 모두 참여하여 현행 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6.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158. 정부는 학교에서 아동의 정보가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두발규정 등이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련 법

159.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아동에 관한 정보보호의 원칙, 「초·중등교육법」은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

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p><교육기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아동 관련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아동에 관한 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및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p><초·중등교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조의 6(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및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p><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비밀누설금지) ‘①아동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 또는 대상아동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 및 대상아동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0. 정부는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동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161. 정부는 2007년 5월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CCTV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또한 사전 주민의견수렴과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운영 관리를 강화하였다. 민간분야의 경우에도 2006년 10월에 마련된 ‘민간분야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두발규정

162. 학교 내에서 두발 규정 및 단속이 아동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권고하였다.

163. 정부는 단위 학교별로 교사·아동·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 등을 정하고 아동의 인격적 손상을 주는 지도방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7.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164.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이 유해한 정보 및 매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도서외의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 및 정보공개

165. 현재 한국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활용한 아동의 정보접근 및 정보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아동의 정보교류가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66.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아동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동용 홈페이지, 외국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167. 정부는 2002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는 교수-학습기능을 수행하면서 독서·정보·문화·레크레이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고 전담관리 인력을 배치하며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168. 정부는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도서관을 갖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교육청 단위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학교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90억원을 지원하였다.

아동에 대한 유해정보 및 매체물 차단

169. 아동에 대한 유해정보 및 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170. 2008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송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불법정보 및 방송제재에 관한 심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 운영,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된다.
171. 정부는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와 유해정보의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게임업계의 자율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업계의 청소년 보호노력에 대한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사업의 목적은 이용자 평가,

자체평가를 통한 사이버윤리수준 측정 및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72. 정부는 2006년에 ‘청소년매체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매체이용도, 이용시간, 유해정보 습득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연구분석을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청소년정책 입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73.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방지 및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유해정보 및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유해매체물 고시

174. 정부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아동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은 정기간행물·방송·영화·비디오·게임물 등에 대해 아동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아동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다.
175. 매체물 심의기구는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176. 보건복지가족부는 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 이외에도 위 심의기구들에서 심의를 요청한 콘텐츠 및 이들 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모든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판단하여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아동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아동도서 보급

177. 정부는 2002년부터 아동 책읽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책읽기 운동은 매년 아동의 '책읽기'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생활이자 문화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 밖에도 한국청소년연맹 등 아동단체와 한국도서관협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등 독서진흥단체가 참여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독서감상대회, 테마독서캠프, 독서활성화사업, 책읽기 운동 문학기행 사업을 전개하였다.

178. 정부는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및 다양한 양서출판 진작을 위하여 '교양도서 선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소외계층 등의 독서접근권 확보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지원되고 있다.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1항)

179.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에 대한 고문,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180.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고문 및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도 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만,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25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181. 고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구금), 제125조(폭행가혹행

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군형법」 제62조, 「국가정보원법」 제19조 등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된다.

182.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24조의 2). 또한 수사기관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얻은 피고인의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재판상 유죄의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

183. 정부는 2007년 12월 「행형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2008년 12월 시행)하여 구금자에 대한 가혹한 징계조치로 지적된 계구의 명칭을 보호장비로 바꾸고,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종전의 계구 중 사슬을 보호장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호장비인 보호복·보호침대·보호대 등을 보호장비에 추가하였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절 STATISTICS

체벌금지 학교

184. 정부는 학교 등에서의 체벌금지를 위하여 초·중등 교사 연수과정에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인권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체벌금지 학교는 2003년에 전체학교의 27.7%에서 2007년에는 69.7%로 증가하였다<부표 4-1>.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현황

185.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의하여 지원한 학교도서관은 6,205개교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3,214개교(51.8%), 중학교가 1,737개교(28%), 고등학교가 1,241개교(20%), 특수학교가 13개교(0.2%)이다. 동 기간 동안 전체도서관 설치율은 82.4%(8,657개교)에서 94.1%(10,422개교)로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장서도 6.5권에서 10.8권으로 증가하였다<부표 4-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186.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간행물, 영상물 등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발달로 최근 3년간 인터넷 분야의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03년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건수는 3,537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5,31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부표 4-3>.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87.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다. 정부는 아동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 교지, 학교신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의 글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합의 절차에 의해 아동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8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나 신앙을 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어 아동의 종교선택의 자유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특

수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사립학교법』과 사학들의 학교 설립 이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아동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방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189. 학생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체벌 전면 금지를 위한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체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5조, 제18조 1항, 2항, 제9조, 제10조, 제27조 4항
제20조, 제21조, 제11조, 제19조 및 제39조, 제25조)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대안양육

CRC/C/15/Add.197, para.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Continue to expand the number of group homes and the foster care system, in particular by providing greater financial support to foster families and increasing the counselling and support mechanisms for foster families;
- (b) Ensure a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of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iews an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herever possible, aims to reintegrate children into a family environment;
- (c)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nd upgrade their skills and capacity to provide assistance to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nd to vulnerable families.

190. 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대안양육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 등 대안양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보조금, 아동상해보험료, 전세자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191.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취약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를 확대·배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정기적인 보수교육, 연수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a) 그룹홈, 위탁가정 등 대안양육 확대

192. 정부는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였다. ‘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다.
193. 정부는 2005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직원의 자격기준, 설치기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194. 2006년부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으로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 주택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룹홈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b) 아동시설에 대한 감사 및 환경개선

195.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 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 「아동복지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폐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7.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3년 마다 아동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8.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이 인권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5년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였다.

(c) 사회사업가의 확대

199. 정부는 취약한 가정의 아동 등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는 2003년 6,977명에서 2007년 10,113명으로 44.9% 증가하였다.

200. 정부는 청소년 문제 해결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3,900명을, 청소년상담사는 2003부터 2007년까지 1,648명을 양성하였다.

201. 정부는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202.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민간종사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

회, 각 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입양

CRC/C/15/Add.197, para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and calls for:

- (a)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of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 (b)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f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203. ‘입양허가제’ 및 ‘헤이그협약’ 비준 등 입양체제 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본 보고서 입양과 관련한 유보조항 부분에서 다루었다.

3. 아동학대와 방임

CRC/C/15/Add.197, para.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reform,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receiving,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when necessary, prosecuting cases in a child-sensitive manner, and provide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in this regard;
- (b)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order to develop a nationwide respons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wher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rather than solely intervention or punishment, and which ensures that all victims of violence have access to counselling and assistance with recovery and reintegration;
- (c) Establish a mechanism for collecting data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buse and neglect,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assess properly the extent of these problems and design policies and programmes to address these concerns.

204. 정부는 2003년을 아동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여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법집행공무원과 검사 등에게 아동친화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조사·수사 및 기소절차에서 아동

친화적인 방식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5. 정부는 2000년 17개소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07년에는 44개소로 확대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유치원장·교직원·종사자, 학원운영자·교습자·소방구급대원 등을 추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지원·종사자 및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의 상담원 및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6. 정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매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현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과 행위자 등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특성, 조치결과, 서비스 제공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표 5-1>, <부표 5-2>.

207.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및 놀이치료, 심리치료, 학습지원,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부모교육, 심리치료, 개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통합을 위해 가정도우미 파견, 멘토링서비스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6개소에 전문치료실, 교육장, 그룹홈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치료·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8. 정부는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아동이 수사절차상 참고인으로 진

술하거나 재판절차상 피해자로 증언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제221조 제3항). 또한 『아동복지법』도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9. 법무연수원에서는 검찰공무원 및 검사, 소년보호 및 교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조사·수사 및 기소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인권교육, 감수성훈련(역할극), 인권감수성훈련 등을 내용으로 2003년부터 총 101회에 걸쳐 3,2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아동부양

CRC/C/15/Add.197: para. 47:

In the light of article 27 an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nforc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based on a court order or agreements between part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stigmatize the child or his or her custodial parent. For instance, the State party might consider establishing a national fund to ensure payment of overdu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to the custodial parent while enforcement measures are enacted, or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child support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salaries of those employees with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210. 정부는 이혼·별거 시 자녀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양육비용 부담 등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만 협

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동양육의무

211. 종래 재판이혼은 재판절차과정에서 자녀양육사항이 결정되고 있으나, 협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자녀양육비용의 부담, 양육자에 대한 협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을 협의하여 양육자 및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법원은 위 협의서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제 1항, 2항)
212.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민법」의 친권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제909조 제1항, 제912조), 동 개념은 가족해체의 경우에도 자녀양육권(제837조 제1항)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의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을 위하여 2003년 이후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2007년 조손가정을 한부모가정에 포함시켰으며, 가정의 건강성 제고를 위하여 200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2005년부터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

213. 「민법」에서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제1항),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고 규정

하고 있다. 동법에 근거한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 및 배려에 관한 책임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214. 정부는 보호자가 좋은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15. 정부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생후3년 미만 영아의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16.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17.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비스육구와 수요과약을 위한 가족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부양 지원, 민주적·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가족생활문화의 발전,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등의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18.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문화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서비스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지원

219. 한부모가정에는 아동양육비 지급, 아동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면제, 한부모 보호시설입소,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조손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취학 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건강가정지원센터

220. 정부는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2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61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동 센터는 전국대표전화 ‘1577-9337’번을 통해 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22. 정부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223.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립·추진

하였다. 2008년 3월에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 지원, 임신전후 건강관리 및 아동 보육·교육지원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24. 2008년 정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단계별 서비스인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입국 전 결혼준비기에는 결혼이민자 및 국내 배우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등이 실시된다. 둘째, 입국 초 관계형성기에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상담활동이 전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을 위해 정보매거진 발행 등을 통한 종합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는 방문교육 등을 통해 아동양육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보화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교육이 실시된다. 넷째, 역량 강화기 사업으로는 출신국별 자조모임 육성 지원, 초기이민자를 위한 멘토역할 수행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민자 적합직종 개발 및 인력양성, 취업연계 등이 추진된다. 그리고 전 단계에 걸쳐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225.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친권상실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근거하고 있다(제924조, 제925조). 「민법」, 「아동복지법」 등은 친권행사의 근본적인 목적인 자녀의 복리에 상치될 때에는 친권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련 법

226. 대한민국의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7. 2007년의 「민법」 개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이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28. 「아동복지법」은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응급조치(제27조)와 보호조치(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로서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리양육보호, 가정위탁보호, 보호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229.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난민의 가족재결합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2008년 7월말까지 인정된 아동 난민은 10명이지만, 모두 부모와 함께 입국한 사례로 현재까지 난민아동과 관련하여 가족재결합은 문제되고 있지 않다.

230.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거치면 누구든지 출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 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난민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귀국이 자유롭다.

4.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231. 기존의 협의이혼 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 등에 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양육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육비용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법

232. 정부는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협의이혼 시에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육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합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3. 정부는 아동 양육비가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계속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234. 정부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아동,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의 가정위탁, 복지시설, 전문치료 및 요양소 등의 입소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발생은 2003년 21,882명에서 2007년 11,394명으로 최근 5년간 47.9%가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효과와 양육미혼모의 증가로 인하여 미혼모아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가정위탁제도의 홍보를 통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가 시설보호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또한 2003년 이후 4배 확충되었다.

가정위탁사업제도

235.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가능한 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안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양육은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36.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다양한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이다. 가정위탁 아동은 2003년 7,565명에서 2007년 16,200명으로 5년간 2.1배 증가하였다.
237. 정부는 가정위탁제도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전국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5년 7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직원의 자격기준, 설치기준, 업무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38. 위탁가정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1년간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 가정이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일 경우에는 일반주택 전세자금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239. 정부는 가정위탁제도를 통한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통한 보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룹홈은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이다. 정부는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은 2003년에 71세대에서 2007년에는 276세대로 5년간 4배가 증가하였다.
240. 공동생활가정유형은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단기보호는 경제적위기, 부부갈등, 별거, 수감,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장기보호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치료보호는 시설보호 부적응 아동, 정서적 문제로 시설보호가 적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41.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퇴소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6. 입양(협약 제21조)

242. 정부는 아동이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능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등 대안양육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43.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아동이나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44. 국외입양은 국내에서의 국외입양과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으로 나눈다.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의 경우에 외국인인 후견인과 함께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은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7.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245. 대한민국은 국가 간의 활발한 이동과 함께 국제결혼 및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탈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6. 2007년 국제결혼은 38,49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처와 이혼한 건수는 2004년 1,61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건수도 2003년 1,789건에서 2007년 3,034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을 본국으로 탈취하려는 사례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아동탈취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8년 동 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관련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제적 아동탈취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해 헤이그협약 가입 여부나, 해당 국가와의 조약 체결 여부 등도 다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8.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247. 아동학대는 아동권리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라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아동학대 상습범은 가중처벌 된다.
248. 현재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의 친권행사 제한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명령제도 등의 도입으로 아동의 보호를 우선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49. 정부는 2006년에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를 내실화하였다. 2회 이상 금고이상 실형 선고자의 신상정보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보호자·아동관련교육 기관장에게 열람을 허용하며 아동 성범죄자는 유치원·학교·학원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50.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3년 20개소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2008년 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보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설치하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251.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전화 '129',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경찰서나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E-mail, 방문 및 서신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접수받고 있으며, 아동학대사례에 개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개별 및 집단상담, 입원 및 통원치료, 놀이치료·미술치료,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되고 학대발생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지원 서비스, 사회복지관 의뢰, 수급권 연결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252.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쇄물, 방송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8,065회, 신고의무자는 1,153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53. 정부는 학대아동의 신고접수 핫라인 즉, 24시간 긴급전화인 '1577-1391'과 복지콜센터 '129'를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방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지킴이 지역네트워크 조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운영

254. 성폭력에 노출된 13세 미만의 피해아동 및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전문인, 아동심리학자, 법률가, 성폭력상담가 등이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여성부는 2005년부터 아동성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하여 전국 15개소에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 센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9.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255.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관련 법

256.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현재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대체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57.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2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8.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259.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 등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조사대상이 된다.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제3절 STATISTICS

요보호아동 및 보호조치

260.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즉, 요보호아동에는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아동,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 해당된다. 요

보호아동 발생은 2003년 21,882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7년 11,394명으로 5년간 47.9%가 감소하였다<부표 5-3>.

261.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요보호아동의 조치결과를 보면, 2004년과 2005년에는 가정보호보다 시설보호가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가정보호가 시설보호를 상회하였다<부표 5-4>.

262.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다수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중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전체 시설아동의 93.1%이다<부표 5-5>.

국내입양

263. 전체 입양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40.6%에서 2006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2007년에 52.3%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입양활성화대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부표 5-6>.

아동학대발생수준 및 아동학대신고건수

264.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보호된 아동학대 건수는 2003년 2,921건에서 2007년 5,581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하였다. 이는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개소에서 44개소로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으로 그동안 은폐되었던 학대아동의 발견 및 보호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학대유형도 신체학대는 감소하는 반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부표 5-7>.

26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03년 1,029건에서 2007년 2,284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부표 5-8>.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266. 정부는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아동의 가정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생활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 입양률을 높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제도를 통하여 입양 허가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재 친양자제도를 통한 입양 외의 일반입양은 당사자 간의 입양신고 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67. 입양의 사후관리는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입양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외입양아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에 관한 자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양아와 친부모 및 위탁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정보제공 및 상봉에 대한 법적 근거, 모국방문사업과 관련한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268. 정부는 아동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6장 기초보건 및 복지

(제6조 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제18조 3항, 제27조 1항, 2항, 3항)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보건

CRC/C/15/Add.197, para.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 (b) Take steps to encourage and educate mothers on the benefits of exclusive breast feeding of infant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nd adopt a national code on breast feeding;
-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act any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women who breast feed their children;
- (d) Undertake a study of adolescent health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policy that addresses, inter alia, education on HIV/AIDS and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problem of smoking and drug abuse amongst teenagers as well as other relevant issues.

269. 정부는 2003년 이후 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 여성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모유수유율은 2003년 16.5%에서 2006년 24.2%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음주 및 흡연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 보건예산 확대 및 의료의 접근성 확보

270.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건의료예산은 2003년 6,144억원, 2004년 6,632억원, 2005년 4,227억원, 2006년 2,165억원, 2007년 35,020억원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되어 예산이 감소하였고, 2007년에는 보건의료 예산에 건강보험 예산이 포함됨으로써 대폭 증가하였다.
27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의료급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와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b) 모유수유 장려

272.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우려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광고 등의 홍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모유수유율은 2003년 16.5%에서 2006년 24.2%로 7.7% 증가하였다.
273. 정부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 모유수유의 장점, 정확한 모유수유 방법 등을 담은 모유수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산 후 30분~1시간 내에 첫 수유를 시작하도록 산부인과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지역보건소에서는 올바른 모유수유방법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4. 이 외에도 1992년부터 유니세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산모들의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의료기관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국 55개 BFHI 병원이 있다.
275. 정부는 직장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실태조사결과, 공공기관 203개 중 모유수유착유시설 또는 여성휴게실 겸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73개 기관으로 설치 비율은 35.9%로 3년 전의 18.36%에 비하여 17.6%가 증가하였다.
276. 「근로기준법」 제75조는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동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시 모유수유를 한 항목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c) 흡연 및 에이즈예방 대책

277.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흡연 및 유해약물 등의 예방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7년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는 아동의 흡연예방 차원에서 ‘담배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금연 지도자 양성과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78. 정부는 최근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2006년에 아동 흡연예방 교육을 위한 창작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하여 전국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보급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금연서약을 유도하였다.
279.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아동에이즈예방 홍보대사’를 양성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병 및 에이즈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주도하는 세대를 양성하고 있다.

280. 정부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전국 시·도 및 보건소, 전국 중·고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에이즈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2007년 'HEAD TO HEART'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 방영되었던 TV광고 “내 친구입니다”를 2007년도 재방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2. 장애아동

CRC/C/15/Add.197, para.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7,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 annex):

- (a)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the culture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rough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campaigns aimed at parents, children,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 (b) Undertak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currently not attending school, which assesses their educational needs and access to education and other social services;
- (c) Expand existing programmes aimed at improving the physical acces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ublic buildings and areas, including school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increase the number of integrated education programmes at pre-primar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281. 정부는 2007년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정기적으로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장애아동의 공공시설 및 학교 등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 장애인 차별 개선

282. 정부는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에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을 차별행위의 범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284. 차별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285.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아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의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 차별행위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동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피해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86. 동법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제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 조사

287. 2005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아동의 수뿐만이 아니라, 가구 및 장애판별 조사, 장애인 개별조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장애아동과 관련한 주요 조사내용은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각급학교 취학·진학실태,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등이다. 본 실태조사는 조사주기를 5년으로 하였으나 2007년 법개정을 통하여 3년으로 조정하였다.

(c) 장애아의 물리적 접근 향상 및 통합교육 확대

28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장애아동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
289. 정부는 2005년부터 특수교육 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급 시설·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특수학교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40개교, 2005년 53개교, 2006년 30개교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부족시설 등을 신·증축하였으며, 2007년에는 35개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다.

290. 정부는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또한 2003년 '제2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이해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사업일 실시되었다.
291.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이동 등 신변처리, 교수·학습활동, 문제행동 관리를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하고 있다.
292. 정부는 2006년도에 특수교육보조원 2,400여명을 배치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익 근무 요원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추가 배치하였다. 2007년도에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 4,000명, 공익요원 1,122명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보조원을 점차 확대·배치할 계획이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제2항)

293. 정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3년 이후 새롭게 추진된 정책에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그리고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사업 등이 있다.

관련 법

294. 정부는 2005년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매년 평균 3천여 명의 아동과 장애인이 실종되고, 그 중 일부는 실종이 장기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에 따라 정부는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하였다.
295. 정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다.

실종아동전문기관 운영

296.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실종아동찾기센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

297.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에 대한 신고·접수 및 전산입력 등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 전국공통 핫라인(132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한 후 아동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유전자와 대조

하여 조기 가족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

298. 정부는 가정해체 등에 따라 증가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투자확대를 통하여 빈곤아동의 가난대물림을 사전에 막고, 빈곤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병·의원, 학원,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의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활용하여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99.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지역(1~2개 읍면동)의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1개 지역당 3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사업 예산은 2007년도 51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98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300. 정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문화·정서·복지 및 영·유아 교육·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 등 학생의 긍정적 태도와 성취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학습을 지도하고, 저학년 아동들을 장시간 교육적인 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생업에 바쁜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01. 정부는 2003년에 8개 지역을 시범 실시한 이래, 2005년에는 15개, 2006년에는 30개, 2007년에는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지자체, 민간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5년간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이후 사업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지원 사업

302. 정부는 새터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에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정부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언어능력 배양, 학습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303. 새터민 아동은 북한이탈 아동으로 탈북경험과 남북한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사회(교육)적응에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새터민 아동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적응력을 제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새터민 아동은 입국 후 하나원에서 초기 적응교육을 받은 후 초등연령층은 삼죽초등학교에서, 중등연령층은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2000년대 이후 새터민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성화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개교되었다.

보육료 지원 사업

304.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보육료지원 사업을 실시 있다. 동 사업은 만 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에게는 보육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와 만5세 이상으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학 전 아동에게는 학업준비와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305. 정부는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사회통합과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 개발

306. 정부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에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였다.
307. '표준보육과정'은 6개영역(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연령집단별(만 2세미만, 만 2세, 만 3~5세 영유아)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령집단별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개인차 등 각각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다.

유치원교육과정 개정

308. 정부는 1969년 유치원교육과정을 최초 제정한 이후 6차에 걸쳐 개정하였고, 2007년에는 수시·개정 작업을 통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새롭게 고시하였다.
309. 2007년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적용하게 되며, 5개의 생활영역(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내용은 1수준, 2수준, 공통수준으로 구분되어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10. 정부는 2008년에 수립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보육, 복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3년 이후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장애아동의 복지 및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장애아동 부양가족에게는 양육환경 및 생활개선을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

보육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교육기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련 법

311. 정부는 2007년 5월에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312. 정부는 2008년 8월,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1차(1998-2002), 2차(2003-2007)를 계승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313.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을 강화하여 선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부모들의 노후 및 사망 이후 장애인 자녀들의 생계비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을 도입하였다.
314.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부양자에게 장애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매월 4.5만원에서 2008년에는 10만원~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315.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에 지쳐있는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애아 돌봄과 휴식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16. 정부는 2007년부터 보육 중인 아동의 통학과 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보육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학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직원이 별도로 없어 장애아 부모들이 직접 통학을 시켜야 하는 등의 제약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317.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교육비 지원은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포함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318.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교육, 의무교육,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장애영아의 교육 지원,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대학에 진학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19.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개선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2001년에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범 설치·운영된 이후, 2005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 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0. 정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농어촌지역 18개소에 특수교사 및 치료교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60개소, 2007년도에는 76개소에 교사를 배치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21.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322.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특수학교에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기관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323. 정부는 2003년 이후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영아사망을 및 저체중아 출산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7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하는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

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324. 정부는 2007년부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정보를 추적 관리하여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

325.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지원,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성건강을 증진시켜 모성과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326. 정부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2년 영아사망률은 천명당 5.3명으로 1996년의 7.7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모성사망률은 2002년과 2003년 모두 천명당 0.006명으로 1995년과 1996년의 각각 0.011명으로 낮아졌다.

327. 정부는 2010년까지 영아사망률을 3.7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임신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통한 고 위험 신생아 출생 예방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임신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산전검진을 최소한 7회 이상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328. 정부는 정신지체 등 선천성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확진 시에는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329. 정부는 2008년부터 지방 국립대학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개 병원 당 10개 병상을 추가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미숙아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영양보충식품 지원사업

330. 신생아의 체중은 태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2,500g 미만을 저체중이라고 한다. 산모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저체중아는 감소하고 있고, 정상체중아와 과체중아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임산부 및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영양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영양보충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염병감시체계 운영

331. 정부는 다양한 전염병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전염병의 유행을 신속·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학교보건교사, 안과의원, 소아과의원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전염병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동 감시체계는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법정 전염병 신고·보고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33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전염병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 등록하는 모든 영유아는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다. 또한 취약아동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33.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BCG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결핵예방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접종시기를 생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조정하여 면역효과를 증대시켰다.

건강보험제도

334.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6세미만 아동이 입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를 면제하고, 2007년 8월부터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성인의 70%수준으로 경감하였다. 또한 동년 11월부터는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아동의 보건·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제도

335. 정부는 학령전기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중 3세 이상의 취학 전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 아동의 건강관리

336. 정부는 2007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구강검진 대상 확대를 통한 학생건강 증진 도모, 비행 예방교육 강화, 보건교육 관련 조항(보건교과 신설)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37.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 약물남용의 예방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의 음주와 흡연 예방, 성교육 등과 관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강검진의 대상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였다.

338. 정부는 매년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행태 조사'를 통하여 질병이환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800개교,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등을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339. 정부는 2006년부터 새로운 '학교건강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검진기관을 통한 검진으로 보다 정확한 학생 질병실태 및 신체발달 상황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종전에는 매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위촉의사가 실시하던 것을 취학 후 3년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아동전문병원

340. 정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 대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한 아동전문병원의 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4개의 국립대 병원에 아동병원 건립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병원에는 100~150 병상 규모의 아동전문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신보건사업

341. ADHD, 온라인 게임중독, 학교폭력, 학습장애 등 아동의 정신건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성인 만성중증정신질환 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아동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2년에 16개 '정신보건센터'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32개소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42. 정신질환은 초발연령이 대개 10대 후반이고, 질병의 경과가 평생 지속되므로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학교단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사업을 현재(초1, 초4, 중1, 고1)에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343.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은 98%에 이른다. 하지만 인터넷·게임의 과다이용에 따른 중독현상 등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소비행위에 따른 피해증가, 가정 내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344. 정부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2002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무료상담 및 예방활동, 700명의 전문상담원을 배출하고 매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상담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345. 정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인터넷 중독 치료협력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연계망을 이용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숙형 치료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해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매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e미디어 다이어트’ 등의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앞으로 정부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치료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346. 정부는 2007년부터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에게 '기초생활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를 대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취업부모가 아동양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47.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48. 급여수준은 생계·주거·교육 및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2008년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32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349.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세대주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가정에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 입학금과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만 6세미만의 아동에게 월별로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학교사업

350.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등을 실시하고 있다.
351.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 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등 교육적 기능도 담당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한다.
352.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 수업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권청소년시설을 활용하여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특기적성 계발활동 및 급식·건강관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53.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수업을 마친 아동을 학교가 보호하고, 아동의 욕구에 따른 교육·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354.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였다. 'CDA'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및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9월

말 현재 28,113명의 보호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

355. 정부는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과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356. 정부는 이를 위하여 탄력적인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에게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의 조성과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5. 생활수준(협약 제27조 제1항, 2항, 3항)

357. 정부는 2003년 이후 모든 아동이 발달에 적합한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가족의 아동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택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급식과 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358. 정부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새싹가정(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정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유엔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급식지원제도

359. 정부는 빈곤,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

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식사 및 관련 식품 등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360. 아동급식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361. 2000년에는 석식만 제공하였던 것을 2001년에는 조식까지 포함하였다. 2004년부터는 방학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중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급식이용 아동의 낙인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06년부터는 지역실정과 아동육구에 맞는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62. 학교급식은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관리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도서 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학생에게 학부모 부담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제3절 STATISTICS

실종아동의 발생

363. 실종아동의 발생건수는 2003년 3,206건에서 2007년 8,602건으로 5년간 2.7배 증가하였고, 실종아동의 발견 후 가정복귀율은 2003년 99.8%, 2007년에 99.9%로 발견된 실종 아동의 대다수가 가정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6-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36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 8개 지역에서 2007년 60개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대상학교도 동년에 79개교에서 517개교로 늘어났고, 대상 학생수는 40,707명에서 335,981명으로 8배가 증가하였다<부표 6-2>.

다문화가족의 아동

365.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2007년에 13,445명으로 2005년도 6,12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외국인 학생 수 중에서 모가 외국인인 학생 비율은 2006년 83.7%, 2007년 88.0%로 증가하여 결혼이민자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표 6-3>.

장애아동의 특수학교 통학수단

366. 장애아동의 특수학교 통학수단은 통학버스 이용이 6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도보, 기숙사, 자가용, 대중교통 순이었다.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학교 장애아동은 4.4%에 불과하였다<부표 6-4>.

영아 및 모성사망률

367. 2002년 영아사망률은 천명당 5.3명으로 1993년 9.9명, 1996년 7.7명에서 1999년 6.2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 또한 1996년 출생아 천명당 6.6명에서 2002년에는 3.3명으로 감소되었다<부표 6-5>.

368. 모성사망률은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0.011에서 2002년과 2003년에 모두 0.006으로 감소되었다. 모성사망률이 감소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결혼율 및 출산율이 감소하여 동 연령층에 임신과 분만에 노출된 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부표 6-6>.

산전수진을 및 저체중아 출산율

36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 비율은 2000년 100%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도에도 유배우부인의 99.9%가 산전수진을 받고 있다<부표 6-7>.
370.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임신기간 중에 산전수진을 11회 이상 받은 부인은 전체의 75.8%에 달한다<부표 6-8>.
371. 유배부인의 저체중아 출산율은 2003년 40.3%에서 2007년에 46.5%로 증가하고 있어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부표 6-9>.

예방접종실적

372. BCG예방접종은 2003년에 74.4%에서 2007년에 76.7%로 신생아의 3분의 2 이상에게 BCG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부표 6-10>.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예방접종율은 2003년에 92.7%에서 2007년에는 99.9%로 증가하여 거의 모든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부표 6-11>.

지역아동센터

373.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244개소에서 2007년 1,800개소로 7.3배가 증가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 및 교육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부표 6-12>.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374.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접근기회 확대 및 조기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의료급여를 확대·실시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 장애예방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

만 최근 증가하는 정신장애 위험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에 정신장애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75. 정부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 및 통합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학교 또는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아동이 있다. 현재 소외된 장애아동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장애아동의 권익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76. 장애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조기치료와 재활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발생 단계부터 초기응급진료, 조기재활,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재활로 연결되는 보건의료 재활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아동의 재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 보육 및 교육 단계에서 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무상교육대상으로 저소득층 장애아에서 전체 장애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77. 최근 국제결혼이 확산되면서 다문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에 대해서는 집단따돌림,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등으로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통합과 건강한 인적자원 육성의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사의 방문지도,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7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CRC/C/15/Add.197, para. 5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Raise the quality of public schools, which is low compared to private schools, by increasing material resources provided to school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 (b) Develop a time-bound strategy for reducing and eliminating the cost of pre-school and secondary education;
-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higher education is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promoting the enrolment of girls and addressing persistent gender stereotypes;
- (d) Review it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ducing competitiveness and reflecting the aims of education set out in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nd in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the aims of education.

378. 정부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꾸준히 높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의무교육을 취학 직전 1년과 중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정책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의 경쟁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즉 대입전형을 실질적으로 다양화·특성화하여 시험점수 위주의 대입 부담 및 경쟁적 풍토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a) 공교육의 질적 향상

379.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학교급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410.1만원, 중학교 445.4만원, 고등학교 592.3만원, 대학 822.5만원으로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부표 7-1>.
380. 정부는 2004년 2월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고, 2007년 3월에는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적·사회적·국가적 폐해를 유발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으며,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 흡수하고 수능과외를 대체하기 위해 e-Learning 시스템 구축, 수준별 수업 확대, 초등 저학년의 '방과 후 보육교실'등 을 운영하였다.
381. 정부는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임을 강조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수업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선택권 확대를 통한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고,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였다.
382. 2006년에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교육신뢰회복, 교육기회의 다양화 및 수월성 제고,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강화, 학교 건강증진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역점과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 학업성취도

평가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수·학습센터 운영,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7차 교육과정 정착 및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구축, 교과서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b) 무상의무교육

383. 정부는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였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있다.

384.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은 2004년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교육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무호적, 주민등록주소, 불법체류아동(무국적자 포함)의 초·중학교 의무교육 취학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들 아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385. 정부는 2004년 7% 수준(12만 4,000천명)이었던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을 2008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10% 수준(17만 5,000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식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차상위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c) 여아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386. 2004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육시설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여 남녀평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발전기본법>

•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387. 정부는 2002년부터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위하여 ‘양성평등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성 차별적 교과내용을 개선하고, 지도 자료를 발간하였다. 2004년에는 양성평등한 교과내용 및 교과목편제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남녀평등 내용이 특정교과목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도 집필지침과 2종교과서 검정기준에 남녀역할에 편견이 없도록 강조하여 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388. 정부는 2006년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 개인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학교 양성평등 지수를 스스로 진단하는 매뉴얼을 발간하여 각급 학교가 양성평등점수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였다.
389.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잠재력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의 기회 차원에서 남녀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여학생의 진학률은 남학생보다 높다. 이는 교육기회의 대폭적인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 등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부표 7-2>.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교육에의 권리(협약 제28조)

고등교육의 기회제공

390. 정부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아동은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외부지원 없이는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신설된 장학금이다. 2008년에 대학에 신·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동 장학금은 재학 중 일정 성적 및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 시까지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에 관한 정보제공

391. 정부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아동이 직업에 대한 정보와 지도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하였다. 특히 직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유형을 다양화하였다.

392. 정부는 1999년부터 '커리어 넷(Career-Net)'을 통한 진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리어 넷'에서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진로·직업정보, 사이버 진로상담, 직업탐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안학교

393. 정부는 2005년 「초·중등교육법」개정 시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

라 정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394. 대안학교는 2007년 현재, 고등학교 과정 21개교, 중학교 과정 8개교가 있으며, 총 2,872명의 아동이 재학 중이다. 재학 중인 아동의 현황을 보면, 일반학교 부적응 아동에서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아동, 새터민 아동까지 다양하다. 대안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7명 정도로 일반학교의 1/3수준이다.

395. 정부는 2006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자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교재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신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학교의 입법 취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조치는 물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제협력

396.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원조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교육원조는 UN MDGs(새천년개발목표) 8대 목표 중 전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향유하도록 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EFA(Education for All)를 실현하고자 한다.

397. 교육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외유상원조(EDCF 차관)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지원되는 대외무상원조, 그리고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398. 민간영역에서는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널’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국민성금과 정부의 대외협력기금으로 북한아동을 위한 학용품 지원과 아시아와 아

프리카 10개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12만명의 아동에게 교육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굿네이버스는 MDG의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실적을 인정받아 2007년에 유엔과 국제노사정 기구연합이 공동으로 처음 시상한 MDG's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2.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3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중·고등학교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은 협약 제29조의 이념과 부합하며,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400. 현재 운영 중인 제7차 교육과정은 협약 제29조의 교육목표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계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주거적 전면 개정' 방식을 취하여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에 교육과정 방식 개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7년의 개정 교육과정에는 아동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401.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이 강화되었다. 또한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은 양성평등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지역사회와 가정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교육

402. 정부는 2007년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학교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연구학교 지정·운영 등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403.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권 및 인권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에 인권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될 교과서에 인권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과서 집필기준 및 교과별 인권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04.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내용 반영, 교사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도 능력 배양,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학교현장의 인권교육 확산 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아동 관련 중앙부처 및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405.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에 시·도 교육연수원의 인권강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2005년에는 인권관련 과목의 대부분이 특수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2007년에는 아동권리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상 인권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406. 정부는 아동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여가와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함은 물론, 시설 운영에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관련 법

407. 정부는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2004년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40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 경영자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였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

409. 정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청소년활동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및 서비스 영역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5년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동센터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아동의 문화활동

410. 정부는 아동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은 아동의 여가 활용과 입시위주의 공교육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체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아동 봉사활동 분야를 제외하고 예술활동·스포츠활동, 다양한 공연 및 동아리활동, '청소년문화존' 등이 아동의 문화활동에 포함된다.

청소년문화존

411. '청소년 문화존'은 방과 후 시간대에 아동이 스스로 전국의 광역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다양하게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문화존은 중앙과 지방이 50:50 매칭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6년부터는 11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시설

412.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나뉘어져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된다.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이용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과학관, 체육시설로 나뉜다. 2005년 10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린이박물관', 2006년 6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되었다.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413.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2001년에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였다. 이 시설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정보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14.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수련시설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거리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15. ‘국제청소년센터’는 2000년 7월에 개원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한국문화자료 소개, 유스호스텔 기능과 청소년단체의 활성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3절 STATISTICS

학교교육 현황

416.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치원교육 3년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수와 교원수는 증가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부표 7-3>.
417. 학생 수 감소와 투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을 넘는 과밀학급이었다. 그러나 점차 감소

하여 2007년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22.7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0명, 일반계고등학교 34.3명, 전문계고등학교 30.1명으로 감소하였다<부표 7-4>.

418. 교원 수의 증가와 학생 수 감소가 결합되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당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3.4명, 초등학교 56.9명, 중학교 42.3명, 일반계 고등학교 32.0명, 전문계 고등학교 27.5명이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970년과 비교할 때 50%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부표 7-5>.

419. 유치원 취원율은 1970년 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31.6%가 되었다. 이후 2000년까지는 26%대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1992년 유치원 원아의 기준이 4,5에서 3, 4, 5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유치원 취원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35.3%, 2007년에는 37.1%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은 이유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과 사설학원 등이 유아교육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420.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1970년 66.1%에서 1980년 95.8%로 증가하였고, 1985년 이후 99.9%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1970년 70.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 90.7%, 1990년 95.7%, 2007년 99.6%에 이르고 있다.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은 물론 중학교 졸업자 역시 거의 전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70년 26.9%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36.4%, 1995년 51.4%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82.8%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7-6>.

421.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계의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 40.2%, 1985년 53.8%, 2007년 87.1%로 나타났다. 전문계

진학률은 1970년대에 10% 미만이었으나 1980년 이후 증가하여 1985년에는 13.3%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였고, 1990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71.5%가 대학에 진학하였다<부표 7-7>.

학업중단율

422. 학업중단율은 총 재적 학생수에 대한 제적자, 중퇴자 및 휴학자의 비율을 말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1970년의 학업중단율은 2.7%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는 0.5%로 낮아졌다. 그러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7년 현재는 0.9% 수준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970년 3.3%에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 1.0%가 되었다.

423.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율은 1970년 4.1%, 1980년 3.4%, 1990년 3.2%, 2000년 4.4%, 2007년 3.1%로 증감이 되풀이 되었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나아가 중학생 조기 유학 등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부표 7-8>.

특수교육

424. 정부는 장애아동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7년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44개교로 특수교육 초창기인 1962년의 10개교에 비해 약 14배,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직후인 1979년의 53개교에 비해 약 2.7배가 증가하였다<부표 7-9>.

425. 정부는 증가하는 장애아동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늘리고, 특수교육 전문 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부표 7-10>.

426.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한 학급이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수학급은 1971년부터 운영되어 2007년 5,753개 학급으로 2006년보다 549개 학급이 증가하였다<부표 7-11>.

427. 2007년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65,940명으로, 이 중 정신지체 아동이 36,041명으로 가장 많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이 3,125명, 초등학교가 32,752명, 중학교가 15,267명, 고등학교가 13,349명, 전공과가 1,447명이다. 또한 3,621개 유·초·중·고등학교의 6,263개 일반학급에서, 7,637명의 특수교육 대상아동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부표 7-12>.

428. 정부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아동은 54.7%이었으나, 2007년에는 65.2%로 증가하였다<부표 7-13>.

청소년활동 지원

429. 정부는 민간 또는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부표 7-14>. 1992년 이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810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부표 7-15>.

430. 정부는 아동이 이용할 수 문화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은 2003년 825개소에서 2007년 1,209개소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에는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부표 7-16>. 전국적으로 아동전용 공공도서관은 45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431. 정부는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교육, 6년의 초등교육, 3년의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정된 국가재정 범위에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32. 현재 대안교육시설은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수가 부족하며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정부는 학업중단 아동의 대안교육 수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시설의 아동이 학력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교재, 교원연수 및 교육정보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6년에만 7만명 이상 발생하였으며,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생의 중도탈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433. 아동의 놀이, 휴식 및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권리는 입시위주의 사교육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다. 200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88.8%, 중학생 74.6%, 고등학생 55%가 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여시간은 제약을 받고 있다.

2004년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은 주말 및 휴일을 컴퓨터 게임과 PC통신(29.7%)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냈고, TV시청(22.9%), 사교 관련 일(13.5%), 휴식, 수면(12.2%)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예술을 감상(3.6%)하거나 여행을 하는 일(0.5%)은 극히 드물어 많은 아동이 야외보다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은 평일 학습에 8시간 16분을 할애한 반면에 교재 및 여가 활동시간은 3시간 23분에 머물렀다.

434. 2008년 6월 정부가 실시한 '학교교육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상의 학생(60.2%)이 정규교과시간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아동의 참여 시간은 줄어들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도 21%나 되었다. 이는 시간부족, 프로그램 미흡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에의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7-17>.
435. 정부는 교육의 경쟁성 심화가 사교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입제도의 개선, 공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력에 대한 편향적 사회인식 및 풍토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436. 정부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을 하여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전·입학은 법적 근거가 없이 학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입학거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 개정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제8장 특별 보호 조치

(제22조, 제38조, 제40조, 제37조 2항, 4항, 제37조 1항
제3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성적 착취

CRC/C/15/Add.197, para. 5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Develop a National Plan of Action o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ich includes measures for effective data collection, as agre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1996 and 2001, respectively;
- (b) Train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on how to receive, monitor, investigate and prosecute complaints in a child-sensitive manner;
- (c) Ensure that all victim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have access to appropriate recovery and reintegration programmes and services;
- (d) Develop preventive measures that target those soliciting and providing sexual services, such as materials on relevant legislation on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minors and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programmes in schools on healthy lifestyles.

437. 정부는 아동 성적 착취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성매매방지대책’,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전담검사·경찰관 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성적착취 피해아동은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보호·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a) 국가행동계획 및 자료수집

성매매방지종합대책

438. 정부는 2004년에 아동과 여성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대책은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 개선과 법·제도 정비,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아동 성매매방지를 위하여 청소년고용 불법업소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개선하였다.
439. 2007년 12월에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3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유린의 감소, 집결지의 축소, 변종 성매매업소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분류기준인 “예방, 보호, 집행”의 틀로 정책을 신설·보완하였다.
440. 정부는 성매매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출된 아동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 긴급생계 보호, 법적·의료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성범죄 및 성착취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아동의 수요에 One-Stop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441. 정부는 성매매와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을 설치하였다. 지역 단위에서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관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또는 ‘성매매방지대책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

442. 정부는 2005년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해매체, 유해생활환경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유해환경 감시운동을 활성화하였다. 청소년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보호제도를 확립하였다. 특히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학교·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자료수집

443. 정부는 2008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의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통계 및 자료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이와 동향, 그 밖의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아동친화적 방식의 법집행

444. 정부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담검사·경찰관 지정·운영,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 진술녹화제도 등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6월 기준으로 49개청에 전용조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제도운동을 위하여 관련종사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08년 말까지 모든 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c) 피해자의 회복 및 통합지원

아동성폭력 지원체계

445. '아동성폭력 지원체계'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분에서 다

루었다(No.254).

청소년쉼터

446. 정부는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선도보호·일시보호·상담·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1992년 최초로 설치된 후,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47.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 역량강화, 고충처리, 문화 및 활동프로그램 제공 등 청소년들의 종합선도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수용자 관점에서 일시, 단기 및 중·장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조치

청소년성문화센터

448.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49.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인식 및 대안마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제공,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450.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 전국 16개 시·도에 1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다. 여기에 기존 일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던 참여형 성교육관 5개소를 포함하였고, 2008년에는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재 2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 소년사법

CRC/C/15/Add.197, para. 5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juvenile justice standards, in particular articles 37, 40 and 39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and in the light of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5, on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nd carry out specialized training for personn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b) Use deprivation of liberty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ensure that all juveniles involved in protection dispositions that may result in deprivation of liberty have access to legal counsel at an early stage;
- (c) Amend legisl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 to decide whether a minor i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or protective dispositions.

451. 정부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소년사법 운영 기관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검사선의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마련하였다.

(a) 국제적 소년사법 기준의 이행

452. 법원은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명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여 이를 참고하고 있다.

453.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고 있다.
454. 경찰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에 소년사건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소년범 수사 시 사회적 약자 보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업무 처리규칙'에는 소년사건 처리 시의 기본원칙과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455. 정부는 경찰종합학교에서 '청소년범죄대책과정', '피해자 서포터전문과정' 및 '인권장사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소년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또한 '소년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신문 기타 보도기관에 공표할 때에는 당해 소년 또는 보호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소, 성명, 직장, 학교 기타 특정인으로 판단될 만한 사항은 공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동의 안정된 심리상태 유지를 위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진술녹화실'을 전 경찰서에 설치하고 있다.

(b) 조기 보조인 선임

456. 정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사건에도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임해야 한다. 위탁되지 않은 일정한 경우 즉,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c) 검사선의주의 보완

457. 정부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보완을 위해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란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品行,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이주노동자의 자녀

CRC/C/15/Add.197, para. 5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mend domestic laws, in particular those 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o include specific provisions which ensure equal access to services for all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b)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of 1990.

458.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아동은 초·중학교 무상교육 및 의료급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 및 출입국 관리법 등 국내법제를 감안하여 비준여부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a) 모든 외국인 아동에 대한 동등한 권리부여

459. 정부는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60. 동법은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회적응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담당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461.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의 경우, 종전에는 출입국 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 학교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2008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

46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동반 허용, 외국인 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 설정, 모든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출생등록 및 국적부여, 불법체류 상태의 해소 조치 등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과 상치된다. 또한

동 조약을 비준할 경우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해, 사회복지비용 증가, 정주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약비준은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가. 난민아동(협약 제22조)

463. 정부는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취업활동의 자유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난민아동은 국적을 불문하고 거주지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

464.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은 정부가 1992년에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465. 정부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난민협약상의 난민 인정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다.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3년의 거주자격을 갖게 되며,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또한 난민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시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난민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

466. 정부는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동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난민관련 정책담당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 전문직원 배치, 난민인정 결정 권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이 모색되고 있다.

467. 동 계획은 난민이 사회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또한 난민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법률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난민지원시설 설립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무력분쟁하의 아동(협약 제38조)

468.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8세 미만 아동의 전쟁참여와 무장단체 가입 등은 「병역법」, 「형법」 등 관련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전투원으로 무력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469. 정부는 2004년에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고, 제8조에 따라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2007년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아동권리위원회가 2008년 5월 동 선택의정서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권고사항 이행현황은 제10장, 11장에서 다루었다.

다. 소년사법(협약 제40조)

470. 소년사법 운영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만 집행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법」 및 「소년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비행 예방의 국가의 조기개입과 선도 중심의 소년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관련법 개정

471. 정부는 2004년에 「소년원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은 종전에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을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신장과 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472. 그 후 「소년원법」은 2007년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 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473. 정부는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 도입,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조사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 등이다.

소년법원

474.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대전·대구·부산·광주의 각 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의 각 지방법원 소년부가 있다.
475.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원

476.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소년원은 소년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477. 종전의 소년원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일반학교로 옮길 경우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개정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 학교를 정규학교화 함으로써 학생들이 정규학교 출신과 동등한 법적권리를 가지고 전·편입학은 물론 사회진출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년원이라는 명칭도 학교명으로 바뀌어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였다.

소년보호처분

478. 종전에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지 못하였다. 또한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호처분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였으며, 보호관찰처분을 할 경우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 교육 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시간 및 단기보호관찰기간을 각각 연장하였으며, 장기 소년원송치처분의 수용 상한 기간을 명문화하였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479. 정부는 「소년법」개정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소년법이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동 제도는 지금까지는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소년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선도의 내용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동 제도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법에 대해서는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고,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비행예방정책

480. 소년사건의 사후처리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소년법」은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법의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소년법」에 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비행예방정책 기본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은 비행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행예방 대책 수립은 소년비행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81. 정부는 2007년 전국 6개 지역의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부적응학생·기소유예대상자 등의 비행예방교육, 검찰단계의 비행소년, 불구속 보호처분대상자 등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의 비행원인진단, 청소년적성검사, 보호자교육, 법교육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등하교 방식 등 개방적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사회적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센터'로 대외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상담조사제도와 심리참여제도

482. 정부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83. '보호소년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4~6일 출석시켜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면서,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84.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 판사가 분류심사 결과 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서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경찰 다이버전

485.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행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는 비행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해 비행소년을 받

견하면 검찰 또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486. 정부는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소년범이 전과자가 되고, 낙인효과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다이버전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신학기초 3개월간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자 합의 및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훈방)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라.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항, 4항)

487.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상 구속사유, 영장발부, 구속영장의 방식 및 집행절차, 검사의 구속 영장청구 등의 규정이 소년에도 적용된다.

구속영장

488.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489. 소년부로 송치가 결정된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 감호 위탁을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보호자·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그 시설에 위탁 및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 운영

490. 소년원 운영에 있어서도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소년원법 개정법률)」에서는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을 처우할 때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소년은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여 비행이 학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91.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이 면회를 신청할 때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소년원장은 면회를 허가하고 있다. 소년이 국선보조인과 면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권 보장을 위해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지왕래를 제한하거나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 주고받은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송치처분

492.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에 대한 수용처분으로서 형사제재에 버금가는 강력한 처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또한 소년원 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부정기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정 「소년법」에서 소년원 송치처분을 함에 있어 장기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용의 상한 기간을 명시하여 소년원 송치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

493. 개정 『소년법』에서는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1항)

494. 18세 미만 아동은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소년법』 제59조에서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18세로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인 소년이 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범죄행위 시에 18세 미만이었으나 과형 당시에 성인이 된 때에도 적용된다.

바. 사회복지지원(협약 제39조)

495.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성폭력,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 신체·정신적 질병·상해의 치료, 피해보상 등 법률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진학 및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496.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수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

497. 정부는 성매수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해 검사의 수감명령에 의한 교육

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여 전국 4개 지역의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교육시설로 지정하여 2006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498. 정부는 2005년부터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관련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499. 정부는 경제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동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1월, ILO 핵심협약인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 협약'과 2001년 3월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아동의 노동권 보장

500. 정부는 아동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연소자의 호적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향후 이를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01. 아동은 근로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연소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단시간 근로를 많이 하는 방학기간에는 매년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502. 정부는 2005년에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동을 노동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교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소자 보호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의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나. 마약(협약 제33조)

503. 마약은 「청소년보호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과 「마약관리법」등 관계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약물

504.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약물’은 제한하지 않으면 심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뜻한다. 주류,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 포함된다.
505.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약물예방 시범학교 운영

506. 정부는 학교에서 모범 또는 리더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또래리더로 조직, 교사와 함께하는 ‘청소년약물예방 모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로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중학교를 ‘약물예방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였다. 동 시범학교는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차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다.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협약 제34조)

507. 정부는 아동을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508. 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처벌의 수준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지만, 정부도 검찰을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범인의 성향, 재범의 위험성, 소아기호증, 피해아동의 피해정도 등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처벌

509. 정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을 한 행위 및 그 미수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그 목적에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위치 추적제도

510. 정부는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위치 추적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8년에 ‘치료감호’를 개정하여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 제8조의 2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제도

511. 정부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열람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가 그 대상이 된다.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를 10년간 등록하고 열람대상자는 5년간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512. 등록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

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이다. 열람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열람권자는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된다. 아울러,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51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학교, 학원, 청소년관련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등에는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시설 등은 성범죄가 관련기관에서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 성폭력 방지

514. 정부는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정도별·학교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학생성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장애학생을 포함한 학생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학생선수 성폭력 방지

515. 정부는 학생선수에 대한 반인권적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반을 구성하여 2008년에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이다. 향후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을 포함한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가 밝고 건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학교 내 성폭력 방지

516. 정부는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07년에 전체 학교의 12%에 불과하던 CCTV를 2010년까지 70% 수준까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 행위 등이 적발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기 위한 '클린 365종합대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517. 정부는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등을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3절 STATISTICS

1. 소년사범

소년범죄 현황

518. 2007년 총 범죄 건수는 2,548,010건으로 이중 소년범죄는 116,135건이며 전체 범죄대비 4.6%를 차지한다. 2003년에 총 범죄 대비 4.3%였던 것이 2005년에는 3.6%까지 감소하였다가 2006년 3.9%, 2007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부표 8-1>.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

519. 정부는 2004년에 소년범죄에 대한 대처를 사법처리 대신 지역사회의 보호 및 선도로 전환하여 소년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선도 중심의 소년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인 '다이버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률은 2003년 10.2%에서 2006년 15.7%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재범 방지 정책 및 프로그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부표 8-2>.

소년범죄 처리

520.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기소, 기소 또는 소년법원 송치 중 하나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2007년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자 115,990명 중 기소유예 49.2%, 소년부 송치가 23.3%이었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부표 8-3>.

소년원 정규학교화

521. 정부는 소년이 소년원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04년 소년원법을 개정하여 정규학교화 하였다.

< 소년원 설치 현황 >

구 분	기 관 (학교명)	설립일	교 육 과 정	
특 성 화 학 교	정보 통신 학교	서울소년원 (고봉정보통신중·고교)	'42. 4.20	○ 중학교 교과교육 ○ 고등학교 교과교육 (컴퓨터애니메이션·멀티미디어정보통신) ○ 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과제빵·영상미디어·e-sports)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67. 3.25	○ 중학교 교과교육 ○ 실용영어·컴퓨터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45.11.21	○ 분류심사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63. 9. 9	○ 위탁소년 인성교육 ○ 대안교육(일반학생, 기소유예)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7.11. 9	○ 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정보 산업 학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47. 1.18	○ 직업능력개발훈련 (카일렉트로닉스·자동화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46.11. 7	○ 직업능력개발훈련 (카일렉트로닉스·자동화용접·증장비·건축환경설비) ○ 분류심사, 위탁소년 인성교육·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46. 10. 1	○ 중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용·피부미용·사무자동화)
	인문계 학 교	대덕소년원 (대산중·고등학교)	'98. 7. 1	○ 중학교·고등학교 교과교육 ○ 의료·재활교육, 5호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위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대안교육(일반학생, 기소유예) ○ 대안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육 ○ 상담조사, 검사결정전조사 ○ 청소년심리상담

2. 노동 착취 예방

연소근로자 사업장 지도·단속

522.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노동부를 통해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연소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23.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에 연소자 고용사업장 1,502개소를 점검하여 876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관련 위반 사항은 대부분 연소자증명서 비치 소홀 등 경미한 사안이며 일부 야간작업 금지 및 최저임금 위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1건을 제외한 전체 위반사항에 대해 소정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되었다.

3.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524. 지난 5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에 반하여 청소년 마약범죄는 2004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8-4>. 한편 2006년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전년에 대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전년도 13.3%에서 21.4%로 증가하였다<부표 8-5>.

4. 청소년 성매매 현황

525. 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는 2004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는 정부의

성매매 방지대책 등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감소하고 있다<부표 8-6>. 청소년대상 성매수 행위의 약 85%는 채팅 등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아동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등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8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처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526. 정부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소년사법」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예방하고, 외국인 아동이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27. 소년사건이 소년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일반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일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이로 인하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이송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으나, 신속하고 공정한 「소년사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
528. 아동의 성착취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의 건전한 성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양성평등진흥연구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건전한 성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기에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교육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제3부 :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

제9장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제10장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
항 이행 현황

제9장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 현황자료

CRC/C/OPSC/KOR/CO/1: para. 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system be established, within a central governmental body, in order to ensure that data o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disaggregated, inter alia, by age and sex, ar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sed, as they provide essential tools for measuring policy implementation. Data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for such offences disaggregated by the nature of the offence.

529. 정부는 아동성매매 및 음란물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2008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자료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통계 등을 연 2회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2. 일반이행조치

가. 법률

CRC/C/OPSC/KOR/CO/1, para.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fully harmonise its legislation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 b) Provide systematic training to judges and lawyer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530.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

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시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 의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관련 법률 을 제·개정할 시에는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규정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531. 정부는 2008년에 부처통합으로 인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법률 정비 시에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32.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를 통하여 선택의정서 조항과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법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은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훈련에서 아동권 리협약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국가행동계획

CRC/C/OPSC/KOR/CO/1, para. 1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orpo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Protocol in its n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mes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nd the Global Commitment adopt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tockholm 1996; Yokohama 2001).

533. 정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4년 에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대책이 수립된 지 3년을 경 과하면서 인권유린의 감소, 집결지(brothel-concentrated area)의 축소, 변종 성 매매업소·인터넷 성매매·해외 성매매 증가 등 성매매방지 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정책과제 분류를 국제사회 분류 기준에 맞추어 “예방, 보호, 집행”(3P:Prevention, Protection, Prosecution)의 틀 로 과제를 재정비하였다.

534. 정부는 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예방: 놀이터·공원 등 CCTV 설치, 「아동안전구역」지정 및 순찰 강화,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아동에 대한 성교육 및 안전 교육 강화, 부모교육 실시, 범국민 캠페인 실시 등
- 금지 및 집행: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 및 공소시효 제도 개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아동대상 범죄 전담 수사반 편성·운영, 성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 ‘엠버경보’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위기 아동 조기발견 등
- 보호: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피해자지원체계의 전국 확대 구축·운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양성·배치,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교육 실시 등

다. 조정 및 평가

CRC/C/OPSC/KOR/CO/1, para.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the Child Rights Monitoring Center with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able it to be fully operational, and consider making it a permanent mechanism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535.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책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3년 권고사항 이행 부분에서 다루었다. 현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라. 홍보 및 교육

CRC/C/OPSC/KOR/CO/1, para. 16,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adequate and earmarke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and courses for all relevant groups of professionals throughout its territory, including police officers, public prosecutors, judges, medical staff and other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in light of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widely known, particularly to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long-term awareness raising campaigns, including the media and training about the preventive measures and harmful effects of all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this regar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should be encouraged.

536. 정부는 아동관련 민간단체의 협약 홍보 및 권리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3년간에 걸쳐 텍스트, 웹, 멀티미디어 교육교재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교재는 시설종사자, 교원, 아동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537. 정부는 매년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포함)은 교급별 연간 10시간 이상, 성매매예방 교육의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에 국가수준의 성교육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학생 성폭력 가·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계도 자료를 홍보하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538. 정부는 200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매년 2월 22일)을 개최

하여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008년에는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함을 널리 알리고 있다.

539. 정부는 2008년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개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55명을 배출하였다. 향후 매년 확대 배출할 계획이다.

마. 자원의 배분

CRC/C/OPSC/KOR/CO/1, para. 1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re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ll areas covered by the Protocol, by providing in particular,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imed at the prevention, prot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victims,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otocol.

540.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예산지원은 2003년 6,324백만원에서 2008년 21,612백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5년 동안에 약 3.4배가 증가한 액수이다. 정부는 성매수 가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위하여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억원, 2008년에는 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성범죄 피해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을 위하여 2006년 2억, 2007년 6.3억, 2008년 6.2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성매수 가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 및 성범죄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위하여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41. 정부는 아동성폭력, 성착취 등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전국 3곳에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503백만원, 2005년 1,445백만원, 2006년 1,350백만원, 2007년 1,350백만원, 2008년 185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007년부터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와 함께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542. 정부는 2008년 3개소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중앙센터 1개소, 지역 센터 16개소로 확충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정례화하고, 성폭력 등 아동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바. 독립기관

CRC/C/OPSC/KOR/CO/1, para. 2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up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order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undertake awareness 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543.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현재 아동전담 상설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에 아동인권 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정책, 차별, 침해, 교육 등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아동인권 프로젝트 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44.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직제령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차회 직제령 개정 등의 작업이 진행될 때, 아동전담 부서 신설 혹은 담당인력 증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3.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의 예방

CRC/C/OPSC/KOR/CO/1, para. 23, 25, 27, 2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arry out further documentation and gender-sensitive research on the root causes, the nature and the extent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order to develop relevant prevention measures, in collaboration with, inter alia, UNICEF, ILO, IOM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earmarked budget resources for preventive measur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stipulated in the Optional Protocol while encouraging stric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xisting legislation criminalising the use of childr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further measures to prevent sex tourism, in particular by earmarking additional funds for public campaigns for this purpose. The State party should also, through relevant authorities, continue its cooperation with the tourism industry, NGO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responsible tourism by the dissemination of the Code of Conduct of the World Tourist Organization among employees within th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awareness raising campaigns for the general publi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s measures within the existing plans of action to address cyber crimes as they relate to the Optional Protocol, with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strengthen its awareness-raising efforts among the general public with a view to informi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about the safe use of the Internet.

545. 정부는 성매매(Prostitution)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과 2007년에는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 성매매클린지수를 개발, 2006년 시범평가 실시, 2007년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546. 정부는 2005년부터 '여성인권증양지원센터'(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종사자 양성, 지원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성매매 방지관련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547. 정부는 성문화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2006년 성매매방지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8개 시·도에 9개 감시단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548. 정부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성매매방지 국민의식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2008년에는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성매매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549. 정부는 NGO 등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시설 기능보강비, 법률·의료·직업훈련·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창업자금, 자활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220억원, 2006년 202억원, 2007년 181억원, 2008년 154억원을 지원하였다.

550. 정부는 2005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8명의 성구매자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성매매사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존-스쿨'은 2006년 22개소(11,217명)에서 2007년에 29개소(15,124명)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존-스쿨의 프로그램 구성내역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 설문 및 분석을 통해 성의식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551. 정부는 2006년에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외 한인사회·여행업체 등에 대한 홍보·교육,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및 검거 방안, 관계부처 간 업무공조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성매매 구매자 및 알선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주관으로 매년 2회에 걸쳐 검찰, 경찰, 노동부, 여성부, 미 대사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신매매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 등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552. 정부는 2008년에 「여권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성매매 알선, 성구매자 등 관련 범죄자들에게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여권의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여행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해외 한인 여행사, 음식점, 유흥업소 대상 건전업소 자체 인증제 추진하는 등 해외 한인회 중심의 캠페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553. 해외 성매매는 피해여성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원정 성구매자의 범죄의식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간 보호·자활지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귀국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것이다.
554.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불법스팸메일 발송자, 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방화 중에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건전정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555. 정부는 아동의 건전한 매체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초·중등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 각급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좌를 활용하여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인터넷 및 모바일 차단 S/W를 개발하여 희망하는 가정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4.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의 금지 및 관련 문제들

가. 형사법 및 규제

CRC/C/OPSC/KOR/CO/1, para. 31, 33,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Protocol, including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rticles 2(c)).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dequately define and criminalize the sale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 b) Amend the definition of child prostitution contain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fforded to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 c) Criminalize all acts that constitute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f the child; and
- d) Amend the relevant legisl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 e) Amend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in order to include, in its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sexual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as required by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 f) Criminaliz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ithout requiring the intent of disse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and prompt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all crim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light of article 3(1)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억제·처벌하기 위한 선택의정서 기준

556. 정부는 국제조직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억제·처벌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정부는 동 협약 및 의정서의 기준과 국내적 이행을 위해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b)~f)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557. 정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558. 정부는 2004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559.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청소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560.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0조),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561. 정부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한 경우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소 및 유죄판결, 법인책임 규정

562. 정부는 아동·여성의 성폭력, 성착취 등을 전담하는 검사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24시간 Hot-Line을 구축하여 실시간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초동 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성폭력 전담 신고전화(1301, ARS '35'번)를 개설하여 신속한 신고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563. 정부는 2004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 시 양벌규정에 의해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하였다.

나. 입양

CRC/C/OPSC/KOR/CO/1, para. 37: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the declaration to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reservation to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and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No. 3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cts covered by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criminalized as sale in its legislation.

564. ‘입양허가제’와 ‘헤이그협약’ 비준에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부분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부당한 동의에 의한 입양은 「민법」과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565. 「민법」 제884조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입양을 취소하고 있다. 또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아동이 양자로 된 때도 입양을 취소하고 있다. 동법 제19조에서는 입양기관이 입양의뢰 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다. 사법권 및 범죄인 본국 송환

CRC/C/OPSC/KOR/CO/1, para. 39:

In light of article 4(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it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hen such offences are committ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has hi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s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566.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

하여도 쌍방가벌성의 원칙 하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567. 정부는 해외에서 성범죄를 한 자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68.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및 외국과의 조약,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의 인도대상 범죄는 정부가 체결한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이며, 아동 성폭력 범죄들은 대한민국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의 경우이다.

5. 아동피해자의 권리 보호

가. 선택의정서에서 금지한 범죄의 아동피해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CRC/C/OPSC/KOR/CO/1, para.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mendments,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any of the offenc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re as such neither criminalised nor penalised, and that all possible measures be taken to avoid their stigmatisation and social marginalisation;
- b) Allocate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representation for child victims;
- c) Ensure that all child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otocol have access to adequate procedures to seek, without discrimin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ose legally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of the Optional Protocol;
- d) Consider merging the existing child helplines (1577, 1391 and 1388) into one helpline which should be sufficiently funded, fully accessible and known to children, and available in multi-lingual format; and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of the Helpline with child-focused NGOs, health and social workers, as well as the police; and
- e) Ensure that resources be earmarked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reintegration and physical and psychosocial recove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3) of the Protocol, in particular by providing interdisciplinary assistance for child victims.

a)~c), e) 성매매피해자 낙인 방지 및 법률·회복지원

569. 정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570. 정부는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는 구출된 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법적·의료적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의료·법률자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 피해청소년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수행, 상담 매뉴얼 발간 등 법률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71.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청소년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성매매대상 청소년 보호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일선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지침을 만들어 성매매 피해아동이 처벌받거나 낙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d) 아동상담전화 통합

572. 정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에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개통하였다. 콜센터는 수요자로서의 국민들이 복지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요 문의에 대한 직접상담 및 안내·연계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아동학대 상담전화 ‘1391’을 ‘129’로 통합하여 보건복지와 관련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73. 기존의 청소년관련 특수전화 ‘1388’, ‘1588-0924’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화를 2005년에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로 통합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과 16개 시·도 및 126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280개 회선을 이용하여 통합 운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나. 형사 사법 제도의 보호 조치

CRC/C/OPSC/KOR/CO/1, para. 43:

The State party should be guided by the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and should in particular:

- a)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by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and explicit prote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 a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considered or treated as juvenile offenders;
- b) Allow the views, needs and concerns of child victim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in proceedings where their personal interests are affected;
- c) Use child-sensitive proced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dship during the justice process, including by the use of special interview rooms designed for children, child-sensitive methods of questioning; and by reducing the number of interviews, statements and hearings, and in this connection, consider making use of video-taping of witness testimonies for all children under 18; and
- d) Presume young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to be children, and not adults, if in doubt.

574.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법 시행 후 3년간, 성매매 피해여성 약 2,000명을 처벌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 금지, 열람 제한’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575. 정부는 2003년의 권고사항 이행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피해아동에 대한 사법제도가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전담검사·경찰제도, 영상물에 의한 진술녹화제, 조사과정에서 신뢰 있는 자의 동석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회복 및 재통합

CRC/C/OPSC/KOR/CO/1, para. 46, 4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and appropriate administrative measures, social policies and programmes are in place to protect all children that are vulnerable to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nd to allow for the full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recovery of child victims, with their full participation.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habilitation measures to boys as well as girls, and in multi-lingual format,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 countries of origi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such programmes are effectively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in the next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rrective education" programme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ensure that the programme prioritis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in line with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General Comment No.10 on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576. 정부는 상업적 성 착취와 인신매매의 희생이 된 아동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지원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를 위한 비용과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577.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심신의 안정과 치유, 구체적 목표 제시,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자활대책이 포함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담치료, 정서치료, 강의(학습), 동기부여로 운영되고 있다.

6. 국제지원 및 협력

CRC/C/OPSC/KOR/CO/1, para. 48: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ing to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further its efforts in this regard,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se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Optional Protocol.

578. 정부는 선택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역내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여성폭력철폐기금'(UN Trust Fund in Support of Actions to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에 5만불을 지원하였다.
579. 여성부와 법무부는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국제인신매매방지 전문가회의 (Expert Group Meeting on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rafficking)'를 개최하였다. 인신매매의 예방(prevention), 피해자 보호(protection), 처벌(prosecution)을 주제로 열린 연례회의에서는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강화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580. 정부는 여성관련 국제회의에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여성관련 사업에의 분담금 기여 등을 통해 '여성인권 신장'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7. 후속조치 및 홍보

CRC/C/OPSC/KOR/CO/1, para. 49,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State Counci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ncial authorities,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related recommend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e made wide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but not exclusively), to the public at lar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media, youth groups, professional groups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Optional Protocol widely known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human rights education.

581. 정부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2008년 6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권고사항을 즉시 국문으로 번역하여 관련부처에 배포하였다. 권고사항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및 관련 민간단체에 통보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홍보 일환으로 선택의정서 및 권고사항을 관련부처, 국회의원, 국방부 및 지자체 아동관련 종사자들이 인지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본 국가보고서를 일반 대중 및 아동관련 단체에 홍보하기 위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제10장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 일반이행조치

가. 홍보 및 교육

CRC/C/OPAC/KOR/CO/1, para. 8,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the light of article 6, paragraph 2, ensure that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 and widely dissemina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State officials, as well as military and peace-keeping personnel, by appropriate means, including the media.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systematic awareness rais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for all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cluding those working with asylum-seeking and refugee children coming from countries affected by armed conflict, such as health personnel, social workers, teachers, lawyers, judges and immigration officials.

582. 정부는 모든 평화유지군(PKO)을 대상으로 특수전교육단에서 ‘표준기본훈련 과목(SGTM; Standard Generic Training Module)’을 실시하고 있다. 표준기본훈련 과목 중 ‘행동강령/문화이해’ 영역에서는 아동보호를 주제로 하여 아동권리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인권담당관실 내 ‘국제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군과 사관학교, 교육사령부 등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하였다. 향후 국방부는 각 군 군사학교 및 교육사령부 등의 교육과정에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내용을 포함시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583. 법무부는 2006년 ‘인권국’을 설치한 이후,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아동을 접하는 출입국 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망명 및 난민아동에 대한 인식제고 및 차별금지 등 체계적인 교육을 연 2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인권’, ‘다문화사회의 이해’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망명 및 난민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

CRC/C/OPAC/KOR/CO/1, para. 1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up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order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undertake awareness 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584.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으나, 인권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에 아동 인권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아동인권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위원회 내 아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 차별, 침해 및 교육 각 부서 담당자들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자체 직제령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아동권리 부서 설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금지 및 관련 문제들

가. 법률

CRC/C/OPAC/KOR/CO/1, para. 13: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 a) explicitly prohibit by law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 b) Ensure that all legislation are fully harmonis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 c) Ensure that all military codes, manuals and other military directiv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the spirit of the Optional Protocol.

585. 정부는 2004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현역병 모집 연령을 기존 17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였고, 2005년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생 중 18세 미만자의 전시기본업무수행을 규정한 공군규정(15-1, 전시교육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각 군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이 17세 이상이므로 17세인 생도(아동)의 무력분쟁참여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군인사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시 장교임용연령을 각 4학년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는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586. 정부는 그 동안 「병역법」상 병역의무이행자의 연령 상한 개정 및 공군규정의 개정, 각 군의 교육규정 등을 정비하여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 정서’의 취지에 상응하도록 하였다.

587.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 국제인권규약들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내용은 국내 관계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나. 역외 관할권

CRC/C/OPAC/KOR/CO/1, para. 15: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ruitment of children for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and their use in hostiliti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extend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for crimes of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by, inter alia, entering into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588.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쌍방가벌성의 원칙 하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군대 또는 무장단체가 징집을 하고 적대행위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이므로 정부는 영역과 국적을 불문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다.

3. 보호, 회복 및 재통합

가. 아동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CRC/C/OPAC/KOR/CO/1, para.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ntroduce a mechanism that allows for systematic identific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of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broad;
- b) carefully assess the situation of these children and provide them with immediate, culturally sensitive and multidisciplinary assistance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 c) systematically collect data on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within its jurisdiction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in their home country; and
- d) include information on measures adopted in this regard in its next report.

589. 정부는 난민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난민인정 심사 시 신원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해당 난민의 출신국 주재 공관 등을 통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치안이 불안하거나 행정체제가 미흡한 국가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으로서도 난민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원확인 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난민인정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아동을 불안정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함으로써 난민아동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90. 정부는 난민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합법적인 체류 보장, 난민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공공교육, 공적구호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민아동은 거주지역의 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91. 정부는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국가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난민아동 등에 대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8년까지 전체 난민인정은 76명이며, 이중에서 난민아동 인정은 2004년 2명, 2007년 6명, 2008년 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는 7명, 아프리카는 3명,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7명, 5~17세가 3명이다. 이 중 남아는 7명, 여아는 3명이다. 현재 난민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사회적응을 전담하는 지원시설은 없으나 2012년부터 난민지원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 북한아동

CRC/C/OPAC/KOR/CO/1, para. 17, 18: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the particular vulnerabilities of children com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nd grant them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on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CRC/GC/2005/6).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coming from the DPRK,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who seek the protection of the State party are not re-fouled.

592. 정부는 탈북아동을 포함한 탈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으며, 탈북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593. 정부는 향후 탈북아동의 의사확인 단계에서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방법,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는 등 아동의 특수한 필요를 감안하여 탈북자 관련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국제지원 및 협력

가. 국제협력

CRC/C/OPAC/KOR/CO/1, para. 20: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its activitie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action to protect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disaggregating the financial data relating to the assistance prov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KOICA) to allow for an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the aid expenditure on children, and in particular, children involved in armed conflict.

594. 국방부는 이라크, 레바논 등 분쟁지역의 파병 군인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지원,

병원·학교 등 건설 및 민·군 협력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분쟁지역의 아동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595. 정부는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코트디부아르 등 분쟁국가의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KOICA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2006년 동티모르에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지원을 통한 여성·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31,980)을 실시하였다.
- 2003년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지원을 통한 식수보건 사업(\$40,790), 2005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지원을 통한 아디스아바바 도시빈민 아동 건축 및 교육사업(\$80,500)을 실시하였다.
- 200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원을 통한 아동을 위한 학교 복구 사업(\$34,870), 학교식수 위생시설 보급 및 위생교육사업 (\$61,030),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지원을 통한 카불 도시빈민촌 개발사업(\$97,780), 2004년 파르완주 학교건립사업(\$927,340)을 실시하였다.
- 2003년 이라크에서 월드비전 지원을 통한 초·중학교 식수 및 위생사업(\$203,640), 세이브더칠드런 지원을 통한 초등학교 복구 및 교구교재 지원사업(\$50,91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지원을 통한 초등학교 설립 및 지역문화센터 지역개발사업(\$369,550)을 실시하였다.
- 2006년 파키스탄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지원을 통한 바타그람 지역의 아동교육사업(\$305,450)을 실시하였다.
- 코트디부아르에는 소아과 전문의를 파견하고있다.

596. KOICA 지원은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 산업 및 에너지, 환경 및 여성의 7개 분야로 나뉘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지원현황 만을 별도로 나누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정부는 전체적인 ODA를 늘려 KOICA를 통한 분쟁국가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록 노력할 것이다.

나. 무기 수출 및 군사지원

CRC/C/OPAC/KOR/CO/1, para.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enact relevant legislation to prohibit trade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countries with current or recent armed conflict that may involve children as participants. In this respect,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dicat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what changes to the domestic law have been made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hanges has contributed to halting sales of small arms to those countries.

597. 정부는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에서 소형무기 등의 분쟁지역 수출 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에 「방위사업법」을 제정하여 주요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대외무역법」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허가 심사 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권 침해 등 국제사회의 규범에 반하는 국가를 수출요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군사용 소형무기 등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5. 후속조치 및 홍보

CRC/C/OPAC/KOR/CO/1, para. 23, 24, 2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ate Council, the Defence Ministry and to provincial authorities, where applicable,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Additionally, in light of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be mad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large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598. 본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정부의 노력은 No. 581에서 다루었다.

【 부 표 】

〈부표 1-1〉 아동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국가예산(A)	118,132,320	120,139,368	135,215,587	146,962,504	156,517,719	
유아 및 초·중등교육 관련예산	17,623,061 (—)	18,985,240 (7.7)	24,390,080 (31.3)	25,257,051 (3.5)	26,835,133 (6.2)	
아 동 관 련 예 산	아동복지 관련예산	84,297(—)	101,182(20.0)	13,670(△86.5 ¹⁾)	21,663(58.6)	70,235(224.2)
	보육관련예산	312,012(—)	404,997(29.8)	600,091(48.2)	791,008(31.8)	1,043,474(31.9)
	청소년 관련예산	89,747(—)	109,824(22.4)	125,039(13.9)	137,815(10.2)	156,536(13.6)
	성폭력·가정 폭력관련예산	6,324(—)	13,675(53.7)	14,563(6.5)	19,013(30.5)	20,352(7.0)
	계(B)	18,115,441 (—)	19,614,918 (8.3)	25,143,443 (28.2)	26,226,550 (4.3)	28,125,730 (7.2)
(B)/(A)	15.3	16.3	18.6	17.8	18.0	

주: 1) 2005년도 예산은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임.

2) ()는 증감률을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2007.

〈부표 2-1〉 아동인구

(단위: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인구(A)	47,859,311	48,039,415	48,138,077	48,297,184	48,456,369
아동인구(B)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B/A)	24.0	23.5	23.1	22.6	22.1
0세	494,291	480,092	453,778	442,831	449,027
1~5세	3,008,495	2,858,133	2,712,913	2,537,401	2,383,255
6~11세	4,177,543	4,112,409	4,016,417	3,922,772	3,806,079
12~17세	3,798,208	3,846,882	3,921,961	4,000,865	4,066,48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

〈부표 3-1〉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급회, 학생회와 협의	35.6	41.8	67.6
설문조사, 공청회	11.9	7.9	7.3
학생회 대표	17.3	8.3	14.1
게시판 의견	2.0	1.5	0.4
의견수렴 없음	12.2	5.4	3.8
잘 모름	17.9	29.6	3.8
기타	0.9	0.4	0
합계	97.8	94.9	96.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부표 3-2〉 징계절차

(단위: %)

구분		집단별			합계
		학생	학부모	교사	
징계통보	아니다	83.7	90.0	13.3	66.0
	그렇다	16.3	10.0	86.7	34.0
소명절차	아니다	87.7	91.6	11.1	67.5
	그렇다	12.3	8.4	88.9	32.5
전문지원	아니다	95.3	99.3	60.9	86.7
	그렇다	4.7	0.7	39.1	1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부표 3-3〉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징계학생 수	7,769	7,488	5,653	6,26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부표 3-4〉 학교폭력 유형

(단위: %)

구분	신체적 폭행피해	협박피해	금품피해	집단괴롭힘
2003	2.97	1.11	3.49	0.92
2004	2.51	3.08	4.22	0.63
2005	2.60	3.58	5.00	2.99
2006	2.86	4.26	5.23	3.2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부표 3-5〉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18세미만인구	11,630	11,420	11,242	11,079	10,904
14세이하인구	9,725	9,573	9,417	9,240	8,996
아동안전사고 사망자수	1,210	1,016	891	756	645
아동10만명당 안전사고사망자수	12.4	10.8	9.5	8.18	7.1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부표 3-6〉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단위: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23,301	24,209	22,226	20,495	19,223
사망	468	394	296	284	276
부상	27,135	29,435	27,431	25,314	23,880
사망자감소율 (2002년 대비)	—	15.8	36.8	39.3	41.0

자료: 행정안전부, 2007.

〈부표 3-7〉 아동 익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아동익사사고 사망자	156	183	156	78
아동추락사고 사망자	108	88	67	5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부표 4-1〉 체벌금지 학교 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비율	27.7%	52.16%	51.0%	53.1%
학교수	2,845	5,369	5,458	5,7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표 4-2〉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증가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학교수	10,503	10,146	10,826	11,016	11,076
도서관수	8,657	9,248	9,696	10,015	10,422
설치율(%)	82.4	86.8	89.6	90.9	94.1
학생1인당 장서수	6.5	7.5	8.32	9.5	10.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부표 4-3〉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청소년 유해매체물 건수	11,122	11,510	21,764	25,938	26,702
인터넷 분야	3,537	7,657	17,131	19,475	15,31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부표 5-1〉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단위 : 건)

연도	가정방문 상담	타기관 의뢰 **	사례 종결 **	격리조치유무				치료조치유무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소계	치료(통원및 입원치료)	비치료	소계
2003	2,921	-	-	1,878	1,040	3	2,921	83	2,838	2,921
2004	3,891	-	-	2,613	1,268	10	3,891	179	3,712	3,891
2005	4,633	-	-	3,238	1,379	16	4,633	194	4,439	4,633
2006	5,202	-	-	3,834	1,361	7	5,202	210	4,992	5,202
2007	5,581	65	1,673	2,896	943	4	3,843	-*	-*	-*
계	22,228	65	1,673	14,459	5,991	40	20,490	666	15,981	16,647

* 2007년부터 조치결과에서 치료부분은 서비스로 옮겨짐.

** 2007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

〈부표 5-2〉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단위 : 건)

연도	계	지속 관찰	교육 및 상담	고소·고발			타기관 의뢰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종결 예정	만나지 못함	사례 종결	기 타
				구속	불구속	진행중							
2003	3,410	92	2,158	47	17	105	23	67	11	20	780	-	90
2004	5,568	1,707	2,125		264		121	78	33	417	656	-	167
2005	6,624	2,195	2,557		299		144	131	70	428	711	-	89
2006	7,793	2,825	2,819		198		206	141	85	786	665	-	68
2007	5,581	3,049	-		214		138	-	-	-	575	1,605	-
계	28,976	9868	9659		1,144		632	417	199	1,651	3,387	1,605	414

* 2007년부터 사례종결이 추가되고, 교육 및 상담, 입원·통원치료, 종결예정, 기타 항목은 없어짐.

〈부표 5-3〉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단위: 명)

구분	총아동 발생수	귀가및연 고자인도	발생유형						
			계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빈곤,실직 ,학대등기타
			남	여					
2003	21,882	11,660	5,540	4,682	628	4,457	79	595	4,463
2004	20,357	10,964	5,153	4,240	481	4,004	62	581	4,265
2005	18,468	9,048	5,351	4,069	429	2,638	63	1,413	4,877
2006	16,008	6,974	4,904	4,130	230	3,022	55	802	4,925
2007	11,394	2,533	4,786	4,075	305	2,417	37	748	5,35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부표 5-4〉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단위: 명)

구분	계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아동시설	장애아시설	미혼모시설	소계	위탁보호	입양	기타	소계
2003	10,222	4,747	42	35	4,824	2,392	2,506	500	5,398
2004	9,393	4,680	38	64	4,782	2,212	2,100	299	4,611
2005	9,420	4,769	48	1	4,818	2,322	1,873	407	4,602
2006	9,034	4,313	53	—	4,366	3,101	1,259	308	4,668
2007	8,861	3,189	39	17	3,245	3,378	1,991	247	5,61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부표 5-5〉 아동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양육시설	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¹⁾	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계
시설수	243	3	8	13	13	2	3	1	286
정원	23,558	150	652	411	750	190	—	—	25,711
현원	17,517	75	436	235	31	163	—	—	18,817
종사자	4,646	33	121	33	190	88	2	7	5,120

주: 1)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 기능을 갖춘 아동상당소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부표 5-6〉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입양	1,564	1,641	1,461	1,332	1,388
국내입양비율	40.6	42.0	41.0	41.2	52.3
국제입양	2,287	2,258	2,101	1,899	1,264
전체	3,851	3,899	3,562	3,231	2,65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부표 5-7〉 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체학대	347(11.9)	364(9.4)	423(9.1)	439(8.4)	473(8.5)
정서학대	207(7.1)	350(9.0)	512(11.1)	604(11.6)	589(10.6)
성학대	134(4.6)	177(4.5)	206(4.4)	249(4.8)	266(4.8)
방임	965(33.0)	1,367(35.1)	1,635(35.3)	2,035(39.1)	2,107(37.7)
유기	113(3.9)	125(3.2)	147(3.2)	76(1.5)	59(1.0)
중복학대	1,155(39.5)	1,508(38.8)	1,710(36.9)	1,799(34.6)	2,087(37.4)
계	2,921	3,891	4,633	5,202	5,58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부표 5-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단위: 건)

연도	유형		신고의무자					소계
	계	시설종사자	전담공무원	교사	의료인	학원교사	소방구급대대원	
2003	3,536	181	575	190	83	-	—	1,029
2004	4,880	226	738	280	102	15	—	1,361
2005	5,761	222	805	431	126	23	—	1,607
2006	6,452	217	1,038	611	114	32	—	2,012
2007	7,083	374	953	771	157	26	3	2,284
계	33,867	1,818	4,747	2,589	697	96	3	8,29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부표 6-1〉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단위: 건·%, '08.7월 기준)

구분	발생건수	발견현황	
		보호자인계(가정복귀율)	미발견
2003	3,206	3,201(99.8)	5
2004	4,064	4,063(100.0)	1
2005	2,695	2,695(100)	-
2006	7,064	7,057(99.9)	7
2007	8,602	8,596(99.9)	6

주: 1) 2005년까지 일반아동 연령기준은 8세 이하이나, 2006년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12.1. 시행)에 의거 14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주: 2) 출처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부표 6-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단위: 명, 교)

구분	2003~2004	2005	2006	2007
대상지역	8지역	15지역	30지역	60지역
대상학교	79	148	262	517
대상학생수	40,707	75,189	153,178	335,98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	(4,758)	(9,765)	(16,719)	(31,54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부표 6-3〉 다문화 아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2	159
2007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구성비	100.0	85.1	11.8	3.1	88.0	90.8	74.4	62.0

주: 1)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부표 6-4〉 특수학교 학생 통학현황

(단위: 명)

구분	통학수단							
	통학버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기숙사	소계	순회교육
	대수	이용학생수						
2007	461	13,933	2,152	780	2,882	2,209	21,956	1,007
								총계
								22,96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실태조사서」, 2007.

〈부표 6-5〉 영아사망률

(단위: 명)

구분	1993	1996	1999	2002
신생아(0~27일)	6.6	4.1	3.8	3.3
신생아후기(28~364일)	3.3	3.6	2.4	2.0
영아(0~364일)	9.9	7.7	6.2	5.3

주: 1)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수임.

2) 영아사망률은 임신22주 이상 또는 출생체중 500g 이상을 출생의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부표 6-6〉 모성사망률

(단위: 명, 천명당)

구분	1993	1996	1999	2002
15~19세	0.002	0.001	-	0.001
20~24세	0.009	0.005	0.004	0.003
25~29세	0.024	0.029	0.018	0.012
30~34세	0.021	0.016	0.016	0.017
35~39세	0.011	0.013	0.010	0.009
40~49세	0.003	0.003	0.003	0.003
전체	0.011	0.011	0.008	0.0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 2005.

〈부표 6-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

(단위: %)

구분	2000	2003	2006
산전수진율	100.0	99.8	9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년.

〈부표 6-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수진횟수					평균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수)	수진횟수
산전수진횟수	1.4	22.8	58.4	14.7	2.7	100.0(948)	31.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부표 6-9〉 저체중아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5kg 미만	전체	1,529	1,980	1,751	1,906	1,819	1,798	2,331
	남	750	923	827	951	930	918	1,176
	여	779	1,057	924	955	889	880	1,155
	발생률 (천명당)	2.40	3.55	3.54	3.86	3.82	4.10	4.69
1.5-1.9kg	전체	4,213	3,863	3,484	3,619	3,705	3,310	4,197
	남	2,146	1,874	1,722	1,795	1,795	1,625	1,960
	여	2,067	1,989	1,762	1,824	1,910	1,685	2,237
	발생률 (천명당)	6.61	6.93	7.04	7.33	7.78	7.55	8.44
2.0-2.4kg	전체	18,404	16,158	14,330	14,373	14,153	13,540	16,605
	남	8,397	7,480	6,599	6,716	6,580	6,190	7,719
	여	10,007	8,678	7,731	7,657	7,573	7,350	8,886
	발생률 (천명당)	28.9	28.9	28.9	29.1	29.7	30.9	33.4
전체 (2.5kg미만)	전체	24,146	22,001	19,565	19,898	19,677	18,648	23,133
	남	11,293	10,277	9,148	9,462	9,305	8,733	10,855
	여	12,853	11,724	10,417	10,436	10,372	9,915	12,278
	발생률 (천명당)	37.9	39.4	39.5	40.3	41.3	42.5	46.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

〈부표 6-10〉 BCG 신생아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구분	대상인구 ¹⁾ (A)	접종실적			B/A ²⁾
		계(B)	보건소	병의원	
2003	490,488	364,994	97,358(26.7)	267,636(73.4)	74.4
2004	451,219	350,445	102,780(29.3)	247,665(70.7)	77.7
2005	413,839	324,070	94,679(29.2)	229,391(70.8)	78.3
2006	424,737	321,744	89,317(27.8)	232,427(72.3)	75.8
2007	449,027	344,318	98,143(28.5)	246,175(71.5)	76.7

주: 1) 대상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0세 인구.

2) 대상인구별 접종실적 백분율.

자료: 보건복지백서, 2007.

〈부표 6-11〉 예방 접종률

(단위: %, 명)

구분	전체학생수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자				미제출자	제출률	접종률
		계	접종자수	접종제외자				
				접종금기	홍역않음			
2003	707,738	656,277	654,844	307	1,126	51,461	92.5	92.7
2004	654,035	652,506	651,020	371	1,115	1,529	99.8	99.5
2005	623,204	622,103	621,615	488	—	1,101	99.8	99.7
2006	601,965	601,349	600,853	496	—	616	99.9	99.8
2007	606,314	606,084	605,649	435	—	231	99.9	99.9

자료: 보건복지백서, 2007.

〈부표 6-12〉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

(단위: 명,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개소수	244	500	902	1,800
이용아동수	23,347	43,782	59,172	76,22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부표 7-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단위: 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003	3,243	4,062	5,061	7,004
2004	3,349	4,124	5,300	7,489
2005	3,601	4,158	5,474	7,270
2006	3,796	4,208	5,863	7,632
2007	4,101	4,454	5,923	8,22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부표 7-2〉 남·녀 고등교육 진학비율

(단위: %)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전문계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남	여	남	여
2003	89.8	90.5	63.5	51.5
2004	89.8	89.8	67.0	57.3
2005	87.8	88.8	72.7	62.0
2006	86.8	88.1	73.4	63.3
2007	86.3	88.0	75.7	66.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부표 7-3〉 학교 현황

(단위: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8,294	23,860	541,550	33,504
초등학교	5,757	126,684	3,830,063	167,185
중학교	3,044	59,067	2,067,656	108,195
고등학교	2,218	56,285	1,862,501	120,585
특수학교	144	3,274	23,147	6,256
계	19,313	265,886	8,301,720	429,46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부표 7-4〉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2003	25.0	33.9	34.8	34.1	31.0
2004	24.6	32.9	35.1	33.8	30.2
2005	24.2	31.8	35.3	33.9	30.0
2006	23.7	30.9	35.3	33.7	29.9
2007	22.7	30.2	35.0	34.3	30.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부표 7-5〉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2003	18.0	27.1	18.6	16.0	13.8
2004	17.9	26.2	19.0	15.8	13.4
2005	17.5	25.1	19.4	15.9	13.5
2006	17.0	24.0	19.4	15.8	13.5
2007	16.2	22.9	19.1	16.1	13.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부표 7-6〉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구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
2003	99.9	99.7	79.7
2004	99.9	99.7	81.3
2005	99.9	99.7	82.1
2006	99.9	99.7	82.1
2007	99.9	99.6	8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각년도.

〈부표 7-7〉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단위: %)

구분	인문계		실업계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2003	90.2	17.6	57.6	90.2
2004	89.8	14.0	62.3	87.6
2005	88.3	12.1	67.6	86.3
2006	87.5	9.8	68.6	83.3
2007	87.1	6.8	71.5	71.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각년도.

〈부표 7-8〉 중·고등학생 학업중단율

(단위: %)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2003	0.7	1.6	0.9	3.2
2004	0.7	1.3	0.8	2.5
2005	0.8	1.3	0.8	2.6
2006	0.9	1.6	1.0	3.1

주: 1) 학업중단자: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적, 중퇴 및 휴학자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부표 7-9〉 특수학교 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5	174	1,024	335
공립	50	1,442	9,973	2,676
사립	89	1,662	11,966	3,130
계	144	3,278	22,963	6,1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0〉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특수학교 수	137	141	142	143	144
특수학급 수	4,102	4,366	4,697	5,204	5,753
계	53,404	55,374	58,362	62,538	65,940
학생수	유치원	1,932	2,677	3,057	3,243
	초등학교	30,838	30,329	31,064	32,263
	중학교	11,055	11,326	12,493	13,972
	고등학교	9,579	11,042	11,748	13,060
교원수	9,175	9,846	10,429	11,259	12,24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유치원	150	174	599	180
초등학교	3,076	3,892	22,498	3,893
중학교	934	1,125	7,500	1,140
고등학교	370	562	4,743	646
계	4,530	5,753	35,340	6,10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2〉 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생수	특수교육대상학생		22,963	35,340	7,637	65,940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819	269	204	2,292
		청각장애	1,334	853	677	2,864
		정신지체	14,365	19,246	2,430	36,041
		지체부자유	3,094	3,002	1,643	7,739
		정서장애	2,139	4,629	927	7,695
		언어장애	161	522	502	1,185
		학습장애	11	6,310	661	6,982
		건강장애	40	509	593	1,142
	계		22,963	35,340	7,637	65,940
	과정별	유치원	1,032	599	1,494	3,125
		초등학교	7,657	22,498	2,597	32,752
		중학교	6,286	7,500	1,481	15,267
		고등학교	6,541	4,743	2,065	13,349
		전공과	1,447	—	—	1,447
		계	22,963	35,340	7,637	65,940
	학교수		144	4,530	3,621	8,295
학급수		3,278	5,753	6,263	15,294	
특수학교(급)교원수		6,141	6,108	—	12,249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1,753	3,914	574	6,2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3〉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특수학교 배치학생수	일반학교(일반학급)배치학생수	전체학생수
2003	24,192	29,212(2,304)	53,404
	45.3	54.7	100
2004	23,762	31,612(3,610)	55,374
	42.9	57.1	100
2005	23,449	34,913(5,110)	58,362
	40.2	59.8	100
2006	23,291	39,247(6,741)	62,538
	37.2	62.8	100
2007	22,963	42,977(7,637)	65,940
	34.8	65.2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4〉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단위: 만명)

활동프로그램	규모	청소년 수
청소년문화존 사업	11개 시·도 31개 존	412
청소년동아리활동	1000개 우수동아리 육성	21
국립수련시설프로그램	2개 국립시설	20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수련관 등 315개소	87
청소년어울마당	251개 시·군·구	57
생활권독서운동	전국 150개소 등	1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부표 7-1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교육청 시설
공공	552	139	189	43	22	11	6	142
민간	258	4	9	133	21	91	0	0
계	810	143	198	176	43	102	6	14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부표 7-16〉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박물관	289	306	358	399	534
미술관	65	74	80	88	103
공공 도서관	471	487	514	564	572
계	825	867	952	1,051	1,2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7.

〈부표 7-17〉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시간

(단위: %)

구분	없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초등학교	50.3	22.6	15.9	11.3
중학교	70.5	13.7	9.8	6.1
일반계고	84.3	10.7	4.0	1
전문계고	77.2	10.7	6.3	5.8
평균	60.2	18.5	12.6	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8.

〈부표 8-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범죄	2,441,267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소년범죄	104,158	92,976	86,014	92,643	116,135
구성비율	4.3	3.6	3.6	3.9	4.6

자료: 대검찰청, 2007.

〈부표 8-2〉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율

(단위: 명, %)

구분	선도유예 인원	죄명별재범자수						
		계	재범율	절도	폭력범	강도	강간	기타
2003	6,122	624	10.2	290	176	13	2	143
				46.5	28.2	2.1	0.3	22.9
2004	4,977	608	12.2	294	176	3	3	132
				48.4	28.9	0.5	0.5	21.7
2005	5,511	668	12.1	307	174	14	3	170
				46.0	26.0	2.1	0.4	25.4
2006	5,626	805	15.7	394	221	18	19	233
				48.9	27.5	2.2	2.4	28.9

자료: 대검찰청, 2007.

〈부표 8-3〉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송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무혐의	기소유 예	기소중 지	기타	
2003	104,325	25,428	6,500	18,928	59,414	3,898	43,207	5,325	6,984	19,483
	(100)	(24.4)	(6.2)	(18.2)	(57.0)	(3.7)	(41.4)	(5.1)	(6.8)	(18.6)
2004	93,060	21,125	5,473	15,652	55,775	3,503	41,619	3,199	7,454	16,160
	(100)	(22.7)	(5.9)	(16.8)	(59.9)	(3.8)	(44.7)	(3.4)	(8.0)	(17.4)
2005	85,887	15,197	4,252	10,945	53,876	3,233	41,059	2,310	7,274	16,814
	(100)	(17.7)	(5.0)	(12.7)	(62.7)	(3.8)	(47.7)	(2.7)	(8.5)	(19.6)
2006	92,789	13,290	3,875	9,415	79,499	3,313	47,435	2,599	7,995	18,157
	(100)	(14.3)	(4.2)	(10.2)	(85.8)	(3.6)	(51.2)	(2.8)	(8.6)	(19.6)
2007	115,990	13,853	4,506	9,347	75,106	4,075	57,041	2,223	11,757	27,031
	(100)	(11.9)	(3.9)	(8.1)	(64.8)	(3.5)	(49.2)	(1.9)	(10.1)	(23.3)

주: ()안은 점유율임.

자료: 대검찰청, 2008.

〈부표 8-4〉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마약류사범	청소년 마약류사범			
		15세 이하	16~17세	18~19세	합계
2002	10,673	0(0)	11(13.9)	68(86.1)	79(100)
2003	7,546	3(8.1)	6(16.2)	28(75.7)	37(100)
2004	7,747	0(0)	0(0)	18(100)	18(100)
2005	7,154	1(3.3)	10(33.3)	19(63.4)	30(100)
2006	7,709	3(9.3)	6(18.8)	23(71.9)	32(100)

자료: 대검찰청, 2007.

〈부표 8-5〉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15세미만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청소년합계
2002	1,172	51	28	117	73	87	62	418
		12.2	6.7	28.0	17.5	20.8	14.8	35.7
2003	912	18	33	37	33	40	37	198
		9.1	16.7	18.7	16.7	20.2	18.7	21.7
2004	685	12	17	23	16	24	29	121
		9.9	14.0	19.0	13.2	19.8	24.0	17.7
2005	699	7	11	14	19	34	8	93
		7.5	11.8	15.1	20.4	36.6	8.6	13.3
2006	683	31	44	30	21	13	7	146
		4.5	6.4	4.4	3.1	1.9	1.0	21.4

자료: 대검찰청, 2007.

〈부표 8-6〉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단위: 명, %)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등관련자	대상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2007. 06	377	1,173	829	123	221)	63	1,110

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훈방조치 되던 대상청소년을 전원 입건함에 따라 인원수 증가
 자료: 행정안전부, 2007.